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日, 웹 3 정책 도입 가속..자민당, 웹 3 정책 개발로 기회 발굴 선도
2. EU의회, 암호자산 과세법안 발의..소득세·거래세·채굴세 신설 요구
3. 美 하원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활동 시작..첫 의제로 스테이블코인 지목
4.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프라이버시 강화 위해 '스텔스 주소' 제안
5. 스위스 암호화폐리, FTX 후폭풍에도 건재..상위기업 기업가치 55% 증가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일본]

日, 웹 3 정책 도입 가속...자민당, 웹 3 정책 개발로 기회 발굴 선도

- 관료·기관 아닌 정치인·정당 중심 웹 3 정책 개발 추진...이해관계자 간섭 배제해 작고 빠른 진행 장점
- 親 토큰 비즈니스, 소득세 정비, DAO 입법 등 제안...웹 3 저작권 및 디자인권 등 후속제안 준비 착수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웹 3를 앞세운 적극적인 디지털 자산 수용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과 정당 중심의 웹 3 정책 개발이 새로운 접근으로 주목받음

▶ **日 정부, FTX 파산으로부터 일본 투자자 보호로 규제 자신감 확보...암호화 겨울을 투자 적기로 판단**

-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전역이 암호화폐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현시기를 웹 3 투자 적기로 판단하고, 활성화 정책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섬
- 일본 정부가 전 세계를 강타한 FTX 파산에서도 일본 투자자를 완벽하게 보호했다는 규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
- 최근 일본 금융청(FSA)은 FTX 실패는 암호화폐 문제가 아니라, 느슨한 내부통제와 규제 및 감독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강조
 - * FSA는 '22년 11월 FTX가 고객 인출 중단 등 이상징후를 보인 직후, 곧바로 FTX 저팬에 대해 ▲영업 정지 ▲국내 자산 동결 ▲사업개선 명령을 내려 투자자 보호에 나섰고, 명령 부과 다음 날 FTX는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함
- 일본 정부는 FTX 파산으로 FTX 자산처리 및 인출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지만, FTX 저팬과 관계사 리퀴드(Liquid)*는 '23년 2월에 자금인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일본 규제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주장
 - * 2022년 2월 FTX는 FSA로부터 타입 1 라이선스를 취득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Liquid를 인수해 일본에 진출함
- FTX는 '22년 11월 파산했지만, FTX 저팬은 일본 고객의 현금 및 암호화폐는 일본 재산권 규정에 따라 FTX 저팬의 소유가 아니라고 발표했고, 리퀴드 계정으로 자산을 이동하면 출금이 가능하다고 설명

▶ **기관·관료 아닌 정당·정치인 중심 웹 3 정책 개발...이해관계자 간섭 배제하고 작고 빠른 진행에 주목**

- 일본 웹 3 정책은 기관이나 관료가 아닌 정당·정치인이 주도하고 있어 이례적으로 평가되며, 이는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총리가 취임 초부터 강조한 웹 3의 빠른 실행과 확산을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
- 자민당(LDP) 소속 기시다 총리는 '21년 11월 총리 선출 이후, 웹 3를 ▲경제 회복 ▲지역 사회 활성화 ▲성장과 부의 재분배 ▲민간 투자의 일본 환원 등 공약 이행을 위한 경제 개혁 핵심으로 삼음
- 기시다 행정부는 경제산업성(METI)에 웹 3 전담 정책실을 신설해 정책 개발 능력을 크게 강화한 데 이어 정치인*들이 참여한 워킹그룹과 협력을 통해 NFT 백서, 웹 3 정책 권고안 등의 성과를 거둠
 - * 자민당 중의원 시오자키 아카히사는 웹 3 정책 권고안 개발을 주도해, 웹 3 기술 백서, NFT 백서 등을 발표했고, 새로 설립된 NFT 워킹그룹 책임자로 자민당 정치인 마사야키 타이아가 임명됨

- 정치인 중심의 정책 개발에 대해 일본 정계는 정통 관료 대신 정치인이 개발을 주도해 보통 몇 달씩 걸리던 정책 초안 작성이 몇 주로 대폭 단축됐다고 긍정 평가
- 웹 3 정책 개발을 주도한 시오자키 의원은 기존 관료적 접근은 2~3주 간격으로 10여 차례 이상의 회의와 자문단 구성 등으로 1년 가까이 걸렸겠지만, 관련 절차를 건너뛰어 프로세스를 9개월 단축했다고 강조
- 시오자키 의원은 이런 접근을 택한 이유를 작게 시작해 빠른 성장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많은 간섭을 받았고 각종 이익 집단과 얽혔을 것이라고 강조*
 - * 시오자키 의원은 웹 3 정책 권고안을 정치인과 변호사가 웹 3 책임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바로바로 작성했다고 언급
- 정치인과 정당 주도로 개발된 웹 3 정책 권고안은 기시다 행정부에서 웹 3 정책을 지원하는 강력한 정치적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
 - * 기시다 총리는 '22년 8월 내각 개편에서 反 관료주의 정치인으로 지명도가 높은 고노 타로(Kono Taro)를 디지털 부 장관으로 임명해 웹 3 개발 정책 추진 임무를 맡김
- '22년 12월 자민당 디지털 사회 진흥본부 웹 3 프로젝트팀*은 '웹 3 정책에 대한 임시 제안'*을 발표해 구체적인 웹 3 정책 권고에 나섰고, 제안 개발에 참여한 의원들은 FTX 파산이 일본의 웹 3 정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
 - * 자민당 디지털 사회진흥본부는 '22년 1월 NFT 정책연구사업단을 신설해 '22년 4월 NFT 백서를 발표해 NFT를 웹 3 확산의 주요 요소로 주목했고, '22년 10월 NFT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웹 3 프로젝트를 신설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웹 3 정책 개발에 나섬
 - * Interim Proposal on web 3 Policy
- 자민당은 웹 3 정책에 대한 제안에서 전 세계가 암호화 겨울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멈춰서 있는 동안, 일본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독보적 역할이 가능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추가 기회 발굴을 주문

▶ 자민당 웹 3 정책 제안, 현시기를 웹 3 글로벌 리더십 도약기로 제시...'23년 G7 정상회담 등을 겨냥

- (배경) 자민당 웹 3 정책 제안 보고서는 '22년 중반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암호화 겨울'로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암호자산 가치 하락 ▲투자 의지 감소 ▲웹 3 프로젝트 확산 지연 ▲글로벌 기업 웹 3 투자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평가
- 하지만, 최근 어려움이 웹 3의 진정한 가치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혁신을 준비할 기회라고 강조하며, '강한 잡초가 강한 바람을 견딘다'는 문구로 일본 웹 3 정책 개발 추진 필요성을 강조
- 자민당은 일본이 웹 3를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웹 3 비즈니스 환경을 구현하면, '23년 G7 정상회담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일본 리더십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일본을 '책임있는 혁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기 위해 공공·민간의 지식과 전문성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 웹 3가 경제·사회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웹 3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넘어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서 혁신적인 사업과 프로젝트의 출시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
- 또한, 블록체인 기술 진화로 디지털자산과 권리는 개인이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토큰 형태로 변환이 가능해 지리적 제약을 벗어나 더 빠른 비즈니스 거래를 지원하고, 토큰의 높은 유연성은 자원봉사와 같은 비경제적 활동 장려와 경영진과 근로자 간 새로운 협업 메커니즘 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예로 들어 해외 송금이 더 빠르고 쉬워지며, 블록체인 변조방지 기능을 이용해 국가 및 지역 공급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담음
- 자민당 웹3 프로젝트팀은 '23년 1분기 중에 웹 3 관련 권장 사항을 백서 형태로 정리 발표할 계획

[자민당 웹 3 정책 개발 분야 및 논의 대상]

주제	논의 대상	날자
웹 3 진화와 국가 전략	Digital Garage	2022.10.12
웹 3 조세 시스템	일본블록체인협회(JBA)	2022.10.21
	일본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	
	일본 신경제협회	
웹 3 콘텐츠 전략	일본콘텐츠 블록체인이니셔티브(JCBI)	2022.10.26
DAO 입법	덴추(Dentsu)	
토큰 비즈니스 감사	넥스트 커맨즈 랩	2022.11.02
FTX 상황 점검	일본공인회계사회	2022.11.10
	일본 신경제협회	
토큰 감사	일본 금융청(FSA)	2022.11.16
웹 3와 스포츠 비즈니스	일본 가상 및 암호자산 거래소 협회	2022.11.18
	일본프로축구리그(J리그)	
웹 3의 사회적 영향	스포츠 생태계진흥협의회	2022.11.24
	파나소닉 홀딩스	
웹 3와 스테이블코인 및 금융 서비스	월드 스캔 프로젝트	2022.12.02
	미쓰비시 UFJ 트러스트앤 뱅킹	
	일본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	
	일본 금융청(FSA)	2022.12.07

출처 : LDP, Interim Proposal on web3 Policy, 2022.12

▶ 親 토큰 비즈니스, 암호화폐 소득세, DAO 입법 등을 제안...웹 3 저작권 및 디자인권 등 후속제안 준비

- (주요 내용) 보고서는 ▲친 토큰 금융 환경을 위한 세제 개혁 ▲개인보유 암호화폐 소득세 개정 ▲암호화폐 기업 회계감사 촉진 ▲DAO 입법 ▲무허가형 스테이블코인 유통 촉진 등의 정책을 제시해 시장 활성화를 모색
- (① 친 토큰 금융 환경을 위한 세제 개혁) 일본의 블록체인 관련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큰 투자가 용이한 환경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 규정은 기업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구분해 연말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존재한다고 지적
- 따라서 현 상황은 일본 투자자가 장부로만 평가받는 외국 투자자에 비해 매우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일본 웹 3 생태계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
- 타인 발행 토큰 보유에서 스타트업 지원이나 블록체인 R&D 지원과 같은 단기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연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일본 웹 3 생태계 발전에 필수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 (② 개인보유 암호화폐 소득세 개정) 일본 암호화폐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는 매우 엄격해 자산거래 소득의 최대 55%(소득세 및 주민세 합산)까지 과세하여 납세자의 해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다고 지적
- 현 제도는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교환 과정에서 법정화폐를 취득하지 않아 납세자의 세무신고가 어려운 점을 문제로 제기
- 개인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 과세와 관련해 ▲암호자산 거래의 손익을 고려해 20% 비율을 분리 과세 ▲암호자산 손실을 다음 해부터 3년간 이월 허용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도 동일한 과세 적용 등을 제안

- **(③ 암호화폐 기업의 회계감사 촉진)** 암호화폐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회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암호화폐 기업의 회계감사 장려를 제안
- 일부 웹 3 기업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지만, 암호자산을 발행 및 보유한 대다수 웹 3기업들의 감사는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일본 웹 3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지적
- **(④ 토큰 사전 검토 절차 강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토큰 상장을 추가할 경우, 일본 가상 및 암호화폐 자산거래소 협회(JVCEA)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제안
- JVCEA는 그린리스트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개선했고, 일본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토큰은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를 시행해 일부 개선됐다고 평가
- **(⑤ LLC형 DAO 입법)**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NFT 백서에서 DAO의 법적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권고한 데 이어, 회원 수, 과세 등을 조속히 정의해 DAO가 기존 기업 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
- 보고서는 일본에서 DAO 도입 고려 및 구축 사례가 빠르게 확산한다고 진단하고, 일본 경제와 지역 발전 관점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
- **(⑥ 무허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촉진)** 디지털자산 거래, 메타버스, 웹 3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허가형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
- 무허가형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통되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 지불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 * '22년 6월 결제 서비스법 개정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하고, 스테이블코인 중개를 허용
- **(⑦ 非 인가 NFT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권리 보유자 이외의 사람이 NFT를 발행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거래 플랫폼에 대해 허가되지 않은 NFT의 제거 요청 및 NFT 정보 제공 강화 정책을 제안
- **(⑧ NFT 규제 및 수익 분배 명확성 강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NFT 게임(GameFi)과 NFT 판타지 스포츠 서비스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관련 서비스의 도박 규제 여부가 아직 불분명해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유통 등 적법한 수익 방식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 자민당은 8대 제안 외에 ▲민관 공동 웹 3 원스톱 상담 창구 ▲디지털 공간의 디자인권 ▲2차 배포에서 로열티 규정 ▲블록체인 투자 수단 및 방식 다양화 등 후속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

- 일본 정부가 웹 3를 암호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확산을 위한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웹 3 관련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삼아 적극적인 확산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나섬
- 웹 3 정책 개발을 기관·관료 조직 대신 정당과 정치인이 주도해 이례적으로 평가되며, 친 토큰 비즈니스 환경 구현, 소득세 개편, 스테이블코인 유통 활성화 등 다양한 기회 발굴에 나섬

[출처]

- Coindesk, 'Japan Embraces Web3 As Global Regulators Grow Wary of Crypto', 2023.1.27
- LDP, Interim Proposal on web3 Policy, 2022.12
- NFTnow, Japan's Government DAO Could Outpace Its Private Sector in Web3, 2022.11.15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EU의회, 암호자산 과세법안 발의...소득세·거래세·채굴세 신설 요구

- 과세법안, 암호화폐를 진정한 지불 수단 및 투자로 평가...암호화폐 이동성으로 EU 단위 과세를 주장
- EU 암호화폐 과세, 조화로운 과세 프레임워크 출현 촉진 및 글로벌 세금 표준 적용 가능성을 강조

유럽의회가 연간 1,700억 유로에 달하는 EU의 예산 확보와 이를 통한 실행력 강화를 주목적으로 암호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해 EU의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논의가 크게 활발해짐

▶ 법안, 암호화폐를 진정한 지불 수단 및 투자로 평가...국경을 넘는 서비스 특성상 EU 단위 과세를 주장

- 유럽의회가 연간 1,700억 유로에 달하는 유럽연합의 재정을 강화하고, EU의 주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암호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
- 유럽의회 예산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EU 재정의 새로운 시작, 유럽의 새로운 시작)*은 암호화폐 시장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 '21년 5월에 시가 총액이 2조 유로에 달했다고 평가
* European Parliament, A new start for EU finances, a new start for Europe, 2023.1.16.
- 초안은 암호화폐가 점차 진정한 지불 수단이자 투자 전략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암호자산을 새로운 EU 과세 자원으로 삼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장
- 초안은 프랑스 발리 헤이어(Valérie Hayer) 의원과 포르투갈 호세 마누엘 페르난데스(José Manuel Fernandes)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암호자산 투자 소득세, 암호자산 거래세, 암호자산 채굴세 등의 신설을 요구
- 두 의원은 EU 차원에서 암호자산을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암호자산의 높은 이동성과 국경을 뛰어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
- EU의 암호자산 세금 부과는 국경을 초월한 암호자산에 대한 특성을 유지해 조화로운 과세 프레임워크의 출현을 촉진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암호자산 세금 표준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강조
- 초안은 암호자산 세금 부과 외에 EU의 법인세 정책 변경, 금융 거래세, 공정한 국경세, 디지털 부담금 등을 거론하면서, EU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세 혁신을 강력하게 요구

▶ 과세법안, EU의 재정 취약성이 정책 미래를 위협한다고 지적...추가 자원 다양화와 확대로 재정 혁신 요구

- (목적) 초안은 EU 예산 관련 각종 협정과 배출권 거래제(ETS) 등 지침을 고려해 EU 목표 달성과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자체 차원에서 조달하기 위해 동 법안을 제안한다고 주장
- (배경) EU 재정의 취약성이 EU 정책의 미래와 EU에 대한 유럽인 및 투자자 신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 혁신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
- 초안은 EU 당면 과제를 ▲전략적 자율성 구축 ▲러시아 화석 연료 의존성 종결 ▲건강 및 에너지 연합

완성 ▲국방 등 공동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등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EU 주요 정책 목표, 핵심 프로그램, 위기 개입 등에서 EU 예산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

- 디지털 등 새로운 공간 및 디지털 시민권 보호와 같은 EU의 새로운 정책적 도전은 새로운 수단과 추가 자원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EU의 탄력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재정 혁신을 촉구
- 추가 자원 다양화와 확대를 통한 재정 개혁은 ▲자금 조달 강화 ▲정책 산출물 향상 ▲EU와 회원국 재정균형 개선 ▲공공 재정 가치의 향상 등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

▶ **암호자산 과세 외에 법인세, 금융 거래세, 공정한 국경세, 디지털 부담금 등을 혁신 방안 일부로 제시**

- 초안은 EU 재원의 다각화 및 새로운 수익 발굴을 위해 ▲법인세 ▲금융 거래세 ▲공정한 국경세 ▲암호화폐 과세 ▲디지털 부담금 등에 대한 검토를 제안
- **(법인세)** EU는 BEFIT(Business in Europe: Framework for Income Taxation)를 통해 법인세 부과에 대한 일관된 접근을 지원하며, '23년 3분기에 채택 예정으로 새로운 재원으로 기대가 크다고 평가
- **(금융 거래세)** 최근 각종 협약 등으로 금융 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 논의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시장기반 과세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 **(공정한 국경세)** EU 단일시장에 유입되는 제품 중 극심한 빈곤에 처한 제3국 근로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판매가격과 근로자 임금차액만큼을 공정한 국경세(fair border tax)로 부과하는 제제 도입을 주장
- **(디지털 부담금)** 유럽의회가 '22년 11월 '23년 말까지 OECD 수준의 다자 간 협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기업에 네트워크 비용 등을 부과하는 디지털 부담금 입법 추진 방침을 강조하고, 대비를 요구
- 팬데믹 기간에 글로벌 기업의 수익과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했음을 강조하고, 위원회에 트래픽을 최적화하고,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식별과 평가를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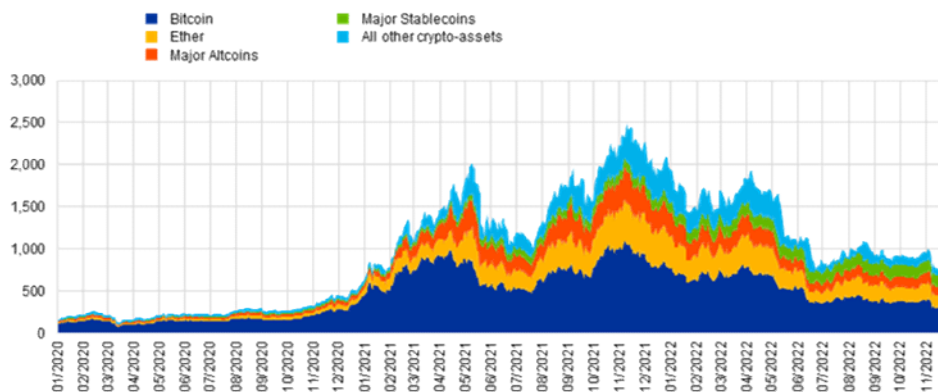
▶ **암호자산, 새로운 과세자원으로 유럽 예산 유입을 제안...다양한 옵션에 대한 영향평가 진행을 제안**

- 초안은 암호자산을 새로운 자체 과세자원으로 평가하고, EU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을 제안
-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은 일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급속도로 성장해 '21년 5월 자본금이 2조 유로에 달하는 등 진정한 지불 수단 및 투자 전략 일부로 간주된다고 평가
- EU의 암호자산 과세는 시장 규제 및 글로벌 조세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화로운 세금 프레임워크 출현과 글로벌 과세 표준으로 자리 잡아 세계 규제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암호자산에 대한 다양한 과세 옵션을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EU 회원국의 암호자산 활동에 대한 동일 소득세 적용 ▲암호자산 거래세 ▲암호자산 채굴세 등을 제시
- 법안은 위원회가 각 옵션에 대해 암호자산 거래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유럽 암호자산 시장의 잠재적 수익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세부 과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

▶ **EC, 회원국 간 과세 정보 공유하는 법안·거래자 정보제공 법안 등 과세 관련 법안 대폭 강화 추세**

- EU 규제 전문가들은 암호자산 과세를 공식 언급한 이번 초안이 더욱 자세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장기적으로 규제 또는 지침으로 확대되거나 구속력 없는 권장 사항 등이 될 것으로 예상
* 발의된 법안은 현재 법안 수정 단계를 밟고 있으며, 법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납세 관련 사항은 27개국 재무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해 실제 법안으로 도입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
- 최근 EU는 암호화폐 과세 관련 새로운 규정 도입이 활발해 EU 집행위원회(EC)가 '22년 12월 EU 회원국 세무당국 간 암호화폐 투자자의 보유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교환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
* Tax fraud & evasion–strengthening rules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and expand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 과세 정보 공유 법안과 함께 EC는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EU에 거주하는 고객을 보유한 모든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을 패키지로 제안
- 새 법안은 암호화폐 기업에 암호화폐 거래자의 거주지, 출생 시기, 장소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암호화폐 구매비용 및 거래를 통한 소득 등의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
- EC는 암호화폐 거래 보고가 도입되면, 규제 당국이 어떤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최대 24억 유로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편, 유럽중앙은행(ECB) 파비오 파네타(Fabio Panetta) 집행이사회 이사는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작업증명 방식 암호화폐에 환경 문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과세 논란을 더욱 가열시킴
* Crypto dominos: the bursting crypto bubbles and the destiny of digital finance, 2022.12.7
- 파네타 이사는 암호화폐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자산과 비교해 우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비용에 따른 세금 부과가 암호화폐 규제의 첫 단계라고 주장

[암호자산 시가 총액 변화 (단위 : 억 유로)]



출처 : CryptoCompare, ECB

- 유럽의회가 암호자산을 '08년 이후 빠른 성장을 통해 진정한 지불 수단 및 투자 전략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하고, 암호자산의 국경을 넘는 특성을 고려해 EU 차원의 과세를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
- 최근 EC가 회원국 간 암호자산 관련 과세 정보 교환 규정과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에 거래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을 제안해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 이슈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출처]

- European Paliament, A new start for EU finances, a new start for Europe, 2023.1.16.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하원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활동 시작...첫 의제로 스테이블코인 지목

- 지난해 발의된 '어글리 베이비' 법안 검토 시작...디지털자산 규제 접근의 표준 모델 도출을 목표로 제시
- SEC와 CFTC 간 규제기관 논란도 정리할 방침...규제 기관 간 협력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강조

미 하원이 '23년 1월 암호화폐 문제를 전담할 소위원회(subcommittee) 구성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소위원회 첫 의제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지목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섬

▶ '22년 발의된 '어글리 베이비' 법안 검토 시작...디지털자산 규제 접근의 표준 모델 도출을 목표로 제시

- 하원의 소위원회 구성은 금융 규제에서 암호화폐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파악하는 인식 변화를 의미하고, 암호화폐에 부정적 견해가 강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후 첫 활동이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
- 소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금융기술, 금융 포괄성 등을 담당하며, CBDC 전문가로 통하는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이 의장을, 친 암호화폐 성향의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의원이 부의장을 맡음
- 힐 위원장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안 검토가 소위원회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규제 당국과 함께 지난해 일부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
- 이와 함께, 힐 위원장은 아날로그 금융 서비스 환경을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요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연방 차원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
- 소위원회는 지난해 패트릭 맥 헨리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어글리 베이비*' 법안을 우선 논의할 방침이며, 동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첫 입법으로 발행자에게 일대일에 해당하는 준비금 보유 등을 요구함
* Ugly Baby Bill : 맥 헨리 의원이 법 초안이 초당적 협력으로 도출됐지만, 꽤 못생긴 아이라고 평가하고, 이 못생긴 아이가 성장하고 더 매력적인 존재로 키워갈 수 있는 점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언급해 붙은 이름
- 소위원회는 어글리 베이비 법안 논의를 향후 디지털자산 규제에 접근하는 방법의 모델로 삼을 계획이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규제기관 논란도 정리할 방침임을 시사
- 위원장은 소위원회는 개발자·소비자·투자자에게 유익한 혁신 창출에 도움이 될 올바른 선택을 위한 협력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고, 양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농업 및 은행위원회 등과 협력 방침을 강조

- 미 하원 암호화폐 소위원회가 '23년 1월 결성된 후 곧바로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를 첫 번째 의제로 삼아 활동을 시작했고, 규제 당국과 함께 지난해 조치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
- 지난해 초당적 합의로 발의된 '어글리 베이비'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제 접근 방법에 대한 모델을 수립하고, 담당 규제기관 논란도 정리할 계획

[출처]

- Coindesk, "Stablecoin Regulation Is First on New Subcommittee's To-Do List, Says Chairman", 2023.01.27.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프라이버시 강화 위해 '스텔스 주소' 제안

- 이더리움, 공개된 블록체인 거래 탓에 프라이버시 보호 필수...기존 정보보호 메커니즘은 한계 노출 지적
- 스텔스 주소, 당사자만 접속 가능 일회용 주소 생성...기술 간단하고 구현 쉽지만 수수료 인하가 관건

비탈릭 부테린이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더리움이 직면한 중대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일회용 수신주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스텔스 주소' 사용을 제안

▶ 이더리움 생태계, 공개된 블록체인 거래 탓에 프라이버시 보호 필수...기존 정보보호 메커니즘은 한계 노출

- 비탈릭 부테린이 블로그를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안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스텔스 주소(stealth addresses) 시스템을 제안
- 이더리움 생태계는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공개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수적이고, 토르나도 캐시 등 정보보호 메커니즘이 사용되고 있지만, 주요 암호화폐 거래만 지원하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
- 부테린은 스텔스 주소가 개인 공개키 주소와 월렛을 암호 화학적으로 연결해 생성되며, 개인 거래 접속은 지출 키(spending key)를 필요로 해 상호작용 없이 당사자만 접속할 수 있는 주소가 만들어진다고 설명
- 따라서 스텔스 메커니즘은 안정적 개인정보보호 환경에서 더 많은 디지털자산을 전송할 수 있다고 강조
- 토르나도 캐시가 주요 암호화폐 거래만 지원하는 데 비해, 스텔스 주소는 POAP, NFT, ENS 등 각종 디지털 자산뿐 아니라 프로젝트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ERC-20 토큰을 비공개로 보낼 수 있다고 강조
- 전문가들은 스텔스 주소 기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구현도 쉬워, 네트워크 전반의 프라이버시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가스 요금(수수료) 문제가 최대 장애물로 지적
- 새로 생성된 스텔스 주소는 0이더리움을 포함하고 있어, 여타 암호화폐나 NFT는 0이더리움을 전송할 수 없어 특정 영지식증명(ZK-SNARKs)을 사용해야 하므로 비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
- 업계는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스텔스 주소가 대중적으로 공개되기를 꺼리는 두 당사자 간 모든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일상적 암호화폐 사용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전망

-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당면 과제라고 강조하고, 새로운 정보보호 메커니즘으로 일회용 주소를 생성하는 스텔스 주소 시스템을 제안
- 관련 업계는 스텔스 주소 기술이 간단하고 구현이 쉬워 대중적 공개를 꺼리는 모든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높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

[출처]

- Crypto Briefing, "Vitalik Buterin Outlines Stealth Address Possibilities on Ethereum", 2023.01.23.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스위스]

스위스 암호화폐, FTX 후폭풍에도 건재...상위기업 기업가치 55% 증가

- 스위스 주크 블록체인 생태계, 관련 기업 1,135개사 활동...최대 호황기 '21년과 유사한 수치 유지
- 파산기업보다 신생기업이 더 많이 등장하고 기업가치 증가세...투명성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스위스 암호화폐 벤처캐피탈(CVC)이 스위스 주크(Zug)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전 세계를 휩쓴 '22년 암호화 겨울 여파에도 불구하고, 파산기업보다 신생기업이 더 많이 등장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분석

▶ 스위스 주크 블록체인 생태계, 관련 기업 1,135개사 활동...최대 호황기 '21년과 유사한 수치 유지

- CVC는 스위스 주크 블록체인 생태계 Top 50 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크게 겪는 기업이 없으며, 지난해 183개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파산했지만, 글로벌 기업 지사 등 190여 개 기업이 새로 등장했다고 분석
- 그 결과,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암호화 겨울 여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업 수가 1,135개 사에 달하고, 이는 최대 호황기를 누렸던 '21년과 유사한 수치라고 강조*
 - * 암호화폐 생태계 총종사자 수는 '21년 대비 4% 감소한 5,766명으로 집계
- 지난해 스위스 주크에서 파산한 최대 기업은 FTX의 유럽 본사인 FTX 유럽(FTX Europe)과 코바리오(Covario)*로 나타났고, 현재 암호화폐 대출기업 넥소(Nexo) 지사가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임
 - * 암호자산 브로커리지 기업으로 디지털자산 모니터링·거래·저장 등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지난 연말 파산을 신청
- CVC는 스위스 당국이 암호화 겨울을 맞아 불투명하거나 부도덕한 기업의 지사 설립이나 인수합병 등을 은연중에 금지하는 정책을 집행*했다고 지적하고, 관련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 FTX 유럽은 지난해 여름 취리히에 위치한 NPB(Neue Privat Bank) 은행 인수를 추진했지만, 스위스 규제 당국이 FTX의 기업 전반의 규제 감독 부족을 이유로 인수를 허용하지 않음
- 한편, 스위스 암호화폐 생태계에 안착한 기업들은 지난해 최고의 성과를 거둬, 암호화폐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상위 24개 기업의 가치는 전년 대비 55% 증가해 97억 달러를 기록함
-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21쉐어스(21Shares)와 이더리움 기반 자산관리 기업 그노시스 세이프(Gnosis Safe)가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여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
- 하지만, 보고서는 피해가 덜할 뿐 '21년 이후 성장 정체를 지적하고, 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 스위스 암호화폐가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요 블록체인 기업의 기업가치가 전년 대비 55% 이상 증가해 97억 달러에 달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스위스 당국이 FTX 유럽의 NPB 인수거부 등 투명성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지만, 암호화폐 생태계 규모가 작고 성장이 더디다고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출처]

- Swissinfo.cn, "Crypto crash fails to deliver death blow to Swiss ambitions", 2023.01.17.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英 암호자산 규제 계획, 강경 규제 대신 적극적인 산업 육성에 방점
2. 美 '22년 암호화 집행조치 58건, 강력 규제로 전년 대비 65% 증가
3. 中, 암호화폐 금지 재고 의견 등장..디지털 위안화 활성화 방해 지적
4. 유럽의회, 스마트계약 기술준수 및 적용 대상 등 대대적 규제 완화
5. 中 장안체인, 2억 4천만 TPS 지원..대용량 스토리지 오픈소스 추진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영국]

英 암호자산 규제 계획, 강경 규제 대신 적극적인 산업 육성에 방점

- 기술 혁신 초기에는 리스크 감수가 적절한 대응이라 강조, 위험 억제보다는 위험 관리 접근을 강조
- 암호화폐 규제, 전통 금융과 경쟁 위한 평준화 도구...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허용 등 산업 육성에 집중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23년 2월 암호자산 경제적 이익과 소비자 보호가 공존하는 암호자산 규제 계획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영국을 글로벌 금융 중심지이자 암호자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

▶ 영 재무부, 암호자산 허브 지향하는 규제 계획 공개...암호화폐 잠재력 인정+투명·공정 기준 보장 강조

- 재무부는 암호자산에 대한 미래 금융서비스 규제 체계*라는 제목으로 암호자산 규제 계획을 공개
* Future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regime for cryptoassets
- 재무부는 서문에서 정부 목표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잘 규제되며, 기술적으로 발전한 금융 본거지가 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이러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기술의 기회 포착과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암호화 기술이 금융서비스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암호화폐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면, 핀테크 분야 세계적 리더로서 경제 성장과 혁신 촉진이 가능하다고 평가
- 재무부는 이번 계획은 '22년 4월 존 글렌(John Glen) 경제부 장관이 제시한 암호화폐 글로벌 허브 목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라고 설명하고, 암호화 겨울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암호화폐 강경 규제와는 접근과 목표가 다르다고 강조
- 재무부는 암호자산 규제는 암호화 산업의 잠재적·경제적 이익을 억누르지 않는 방식의 소비자 보호에서 시작될 것이며, 암호화 기술 이점을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험을 완화하는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
- 암호자산 시장은 환경 및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혁신 초기에 바람직한 접근이며, 위험을 억제하기보다는 관리하려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위험 관리는 명확하고,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규제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
- 효과적인 규제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기업이 영국에서 번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기업과 개인이 관련 산업의 높은 위험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
- 현재 영국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2000(FSMA)*에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서비스 규제에 포함시키는 입법 기반을 마련해 암호자산 잠재력 구현이라는 목표 구현이 시작됐다고 평가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 원래 영국 금융 규제는 업권별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했으나, 금융 감독 및 투자자 보호 등에서 한계가 나타나 FSMA 제정을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의 통합 규제에 나섬
- 재무부는 이번 계획이 암호화 자산대출에 대해 세계 최초로 체계적 제재를 도입해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기업의 운영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암호자산 규제, 전통 금융과 경쟁을 위한 평준화 방안...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허용·보고의무 면제**

- 재무부는 전통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에 따라 광범위한 암호화 자산 활동이 규제되며, 여기에는 암호화 거래소, 암호화 저장 및 대출에 대한 규제가 포함된다고 설명
- 재무부는 암호자산이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2000(FSMA)*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암호자산만의 별도 규제 체계 도입은 없다고 강조
- 계획에 담긴 암호자산 규제는 암호자산과 전통 금융 간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금융행위감독청(FCA)*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기존 FSMA의 규정을 일부 조정할 방침이라고 언급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독립된 영국 금융규제기관으로 건전성감독청(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및 금융정책위원회(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와 협력해 금융 관련 규제 요건을 설정하며, 소매 및 도매용 서비스 기업의 행동 규제에 중점을 둠
- 영국 당국은 국제적 추세와 달리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안정적(Stable)' 용어 대신 '뒷받침되지 않은 암호자산(unbacked crypto assets)' 개념을 도입
- 또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에 대해 적절한 담보 가치 평가, 이용자들이 거래하는 최대 시장거래처의 실패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과 같은 별도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
- 재무부 앤드류 그리피스(Andrew Griffith) 장관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술 변화와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영국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암호자산 기술은 핵심기술로 고려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보장을 통해 새로운 기술 수용에 나선 소비자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강조

▶ **암호자산 규제 계획, 총 14장으로 구성...정의부터 활동, 발행, 중개, 커스터디, 대출 등 포괄적으로 접근**

- 재무부 암호화폐 규제 계획은 14장으로 구성됐고, 1~3장은 암호자산 정의, 입법적 접근, 규제 가능성을, 4~10장에서 암호자산 관련 활동, 발행, 거래, 중개, 커스터디, 시장남용, 대출 플랫폼 운영 등을 다룸
- 11~14장은 디파이, 기타 암호자산, 지속가능성, 규제 계획에 대한 증거요청(Call for evidence)으로 구성
* 정부 정책에 대한 대중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로, 협의를 단순화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입
- **(1장 암호자산 및 현 규제 환경)** 최근 몇 년간 암호자산 활동은 광범위하며 복잡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생태계로 진화했고, 관련 행위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기회와 위험을 제공
- 하지만, 사용자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혁신 잠재력은 기술이 안전하게 채택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지속 가능하게 실현 가능
- 정부는 암호자산과 이를 뒷받침하는 활동은 유사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를 먼저 따르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의 잠재력 활용 및 암호자산이 제기하는 위험에 상응하는 활동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
-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은 ▲영국의 경쟁, 성장, 혁신 장려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 결정 ▲영국 금융 안정성 보호 ▲영국 시장의 완전성 보호 등이 목표임
- **(2장 암호자산 정의 및 입법적 접근)** FSMA는 암호자산을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데이터 기록이나 저장을 지원하는 기술(분산원장 기술 포함)을 사용하는 가치 또는 계약상 권리를 암호로 보호한 디지털 표현을 의미한다고 정의

- 정부는 영국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인 FSMA를 이용해 암호자산과 관련 활동을 규제해 규제 명확성, 신뢰성을 활용할 계획
- FSMA를 이용하지 않고 암호자산 맞춤형 규제 체계 개발도 고려했지만, 공정경쟁 원칙(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에 어긋나고 중복규제 및 시장 참여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
- **(3장 암호자산 규제 가능성)** FSMA와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간 상호작용을 통해 암호자산 및 관련 활동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암호화폐는 FSMA 외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지원금지(AML/CTF), 금융 프로모션(Financial Promotions)*, 법정화폐 지원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정(1단계) 등의 규제가 상호 유동적으로 적용
 - * 금융 프로모션 활동에 대한 허용 및 금지에 대한 규정으로 금융 프로모션에서 관련 권한 보유자 또는 승인자 이외의 사람은 투자 활동 참여를 권유하지 못함, 암호화폐 기업이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금융 프로모션이 가능해짐
- 현재 FSMA 개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 결제자산의 규제 포함 ▲FCA를 규제기관으로 지정 ▲이중규제 해소 메커니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
- **(4장 암호화폐 활동)** 암호자산 생태계는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로 구성됐지만, 투자 및 관리 부분은 기존 FSMA에 포함된 전자화폐와 유사하며, 채굴 및 검증은 기존 금융과 전혀 다르다고 구분
- 다양한 활동은 다양한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가지 규정을 모든 암호자산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암호자산 활동 미러링 등을 통해 암호자산 시장에 맞는 새로운 분류 및 규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통상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예비 자산이 필요하지 않아 담보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지만,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 예외사항으로 다루는 접근을 바람직하지 않음
-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규제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의 투자 약속에 대한 안정성 메커니즘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을 효율적인 대안임
- **(5장 암호화폐 IPO)** 증권에 적용되는 금융서비스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IPO를 직접 규제하지 않음
- 하지만 증권과 달리 암호화폐는 코드 프로토콜에 의해 생성 및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제공 기준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 **(6장 암호화폐 운영)**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통 금융시장 인프라와 비교해 아직 초기 단계며, 거래자 신용, 시장, 환율 및 운영위험 등 암호자산 거래소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식별함
- 정부는 암호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서비스 제공기업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로 정의하고, 승인, 라이선스 규칙, 건전성 요구사항, 운영 탄력성 규칙, 소비자 보호 규정 등 다양한 의무를 부여
- **(7장 암호화폐 중개)** 전통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중개자 역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존 '투자 거래 주선' 및 '투자 거래 준비'와 같은 규제 활동과 공통점이 다수 존재

- 암호자산 중개는 ▲모든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 ▲투자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행 ▲이해 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와 준비 등을 원칙으로 제시
- **(8장 암호화폐 커스터디)** 커스터디는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액세스와 안전한 저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암호자산 수명주기의 주요 측면을 나타내며, 개념적으로 전통 금융과 유사하다고 설명
- 하지만 아직 영국에는 아직 암호자산 수탁 제도가 없어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영국법과 웨일스법 조정 방향을 고려하고 있음
- 암호자산 수탁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산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충분한 재정 보유 ▲암호자산 분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 절차 ▲적절한 시스템 통제 및 관리 ▲충분한 시행 능력 유지 등을 규제 원칙으로 제시
- **(9장 시장남용)** 영국의 시장남용 제도(MAR, Market Abuse Regime)는 영국, 지브롤터, EU에서 거래가 허용된 금융상품 및 해당 상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파생상품 등에 적용되며, 내부자 거래, 내부 정보 불법 공개 및 시장 조작을 금지
- 암호자산에도 시장남용 제도가 적용되며, 암호자산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남용 행위에 대한 식별 및 규제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 **(10장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대출은 암호자산 및 디파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기존 전통 금융의 거래소 마진을 대출하는 증권대출이나 무담보 신용 대출과 유사
- '22년 파산한 셀시우스 플랫폼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실한 위험 관리는 플랫폼과 고객에게 큰 손실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대출 플랫폼의 활동은 일반적 규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평가
- 암호자산 대출 규제에서 대출 및 차용 활동에 참여하는 플랫폼이 거래자 신용 위험을 관리하고 만기 도래 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재정을 보유하고 기업이 적절한 담보평가를 포함해 담보의 위험 관리를 하는 방안을 고려
- **(증거요청)** 탈중앙화 금융, 기타 암호자산 활동, 지속가능성, 본 계획에 대한 대응 등 4개 주관식 질문을 제시하고 구체적 답변을 요청
- 탈중앙화 금융은 영국 시장 규모 측정 방법과 개인 투자 가치의 측정 방법, 유사 탈중앙화 금융과 중앙화 금융(CeFi) 규제 방법의 차이, 탈중앙화 측정 및 검증 지표 등을 질문
- 기타 암호자산 활동 관련해서 암호화폐 투자 자문이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관리 등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영국에서 채굴 및 검증 활동 규제가 장점이 있는지 등을 질문
-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는 암호자산 합의 메커니즘의 환경적 영향 추정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와 사용 방법, 관련 지표를 다른 지속가능성 지표와 상호운영이 가능한지 등을 질문

▶ 자민당

- 암호자산 규제 계획이 발표되자 영국 정계와 업계 등에서 정책적 효과와 경제적 이익 등에 찬반이 엇갈림

-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는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 초안에 대해 크게 환영
- 바이낸스는 초안 발표 직후, 암호화폐 기업에 시장 데이터를 정기적 보고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의 주류 채택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규제라고 평가
 - * 하지만, 거래는 관련 데이터를 유지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 리플 역시 영국 정부의 규제안은 국제 모범 사례에 들어맞는다고 평가하고, 포괄적 위험 기반 프레임워크 정착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 장려에 나설 것을 제안
- 보수당 해리엇 볼드윈(Harriett Baldwin) 재무위원회 의장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암호화폐 규제 도입으로 암호화폐가 덜 위험해진다고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 알고리즘 규제 전문가인 제러미 바넷(Jeremy Barnett) 교수는 암호화폐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적절한 규제 도입으로 영국이 얻을 것이 많다고 평가
- 재무부는 암호화폐 기업, 금융기관, 무역협회, 학계, 소비자 그룹 등에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의견 수렴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은 4월 30일 종료될 예정

- 영국 재무부가 최근 암호화폐 강력 규제 흐름과 다르게 암호자산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의 소비자 보호에서 출발하는 규제 계획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 돌입
- 영국 규제 계획은 암호자산을 기존 금융 규제(FSMA)에 포함해 규제하며, 암호자산과 전통 금융간 경쟁을 위한 평준화 도구로 활용하며, 이의 일환으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및 코인 프로모션을 허용

[출처]

- Gov.uk, 'UK sets out plans to regulate crypto and protect consumers', 2023.02.01.
- BBC, 'Government promises robust crypto regulation', 2023.02.01.
- ComputerWeekly 'UK government announces plans to protect consumers through cryptoasset regulation', 2023.02.02.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22년 암호화 집행조치 58건, 강력 규제로 전년 대비 6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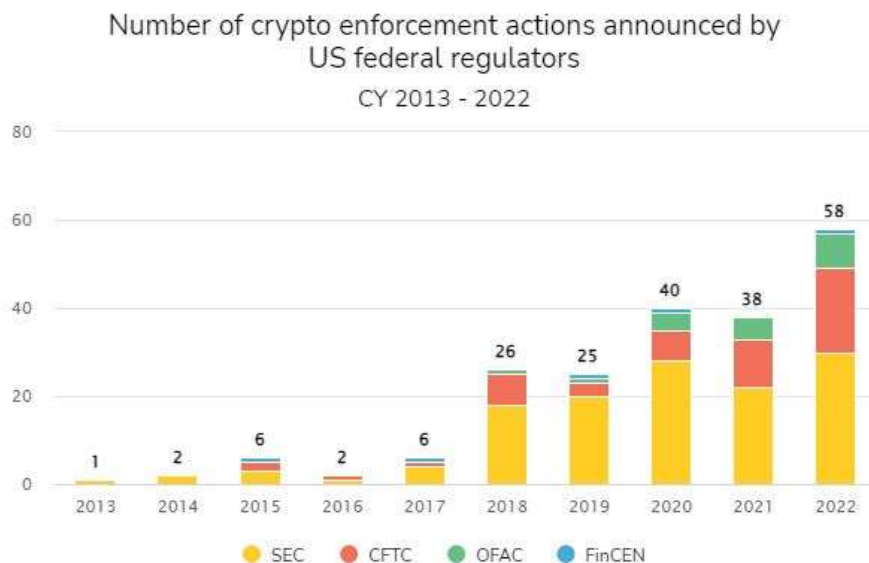
- SEC, 토큰발행자·암호화폐 거래소가 집행조치 과반...암호화폐 증권 여부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다툼
- OFAC, 다크넷·믹서 등 신규 서비스 규제...토네이도 캐시 규제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영향

'22년 미 암호화 규제 당국의 암호화 집행조치(Crypto Enforcement Actions)가 전년 대비 65% 증가한 56건을 기록했고, 특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0건으로 전 세계 규제 당국 중 최다를 기록함

▶ SEC, 30건 집행조치로 전 세계 규제기관 중 최다...CFTC, 매년 가파른 증가세 보여 '22년에도 73% 증가

- 블록체인 모니터링 전문기업 솔리더스랩스(Solidus Labs)가 암호화 집행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규제 권한을 보유한 4개 기관*이 총 58건의 암호화 집행조치를 발표했다고 분석
- * 2023 Crypto Enforcement Trends: SEC & CFTC Set Records as States Take the Lead
- * 암호화폐 규제 권한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해외자산통제국(OFAC), 금융범죄집행 네트워크(FinCEN) 4개 기관이 보유
- '22년 암호화 관련 58건의 집행조치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수치며, 역대 가장 많았던 '20년 40건을 넘어선 수치로 미 행정부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암호화 강력 규제를 촉구한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
- 58건 집행조치 중 SEC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CFTC가 19건, OFAC와 FinCEN이 8건, 1건으로 뒤를 이음
- SEC 집행조치 건수는 전 세계 규제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며, CFTC는 '21년 11건에서 '22년 19건으로 7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미 암호화 규제 당국의 연도별 집행조치 건수]



출처 : Solidus Labs, 2023 Crypto Enforcement Trends, 2022.2.

- 미 암호화 규제 4개 연방기관은 '13년부터 '22년까지 암호화 시장에서 총 36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 중 34억 달러를 SEC와 CFTC가 부과해 두 기관이 암호화 규제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 암호화 규제 당국별 암호화 관련 벌금 부과]

구분	SEC	CFTC	OFAC	FinCEN
'13~'22	2,610,000,000	790,000,000	200,000,000	25,200,000

출처 : Solidus Labs, 2023 Crypto Enforcement Trends, 2022.2.

▶ SEC, 토큰발행자·암호화폐 거래소가 집행조치 과반...암호화폐 증권 여부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다툼

- SEC는 지난해 30건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조치를 발표해 '21년 22건에서 36% 증가했고, 9건의 체포*를 진행해 적극적인 암호화폐 규제에 나섬
- * SEC는 '21년에 4건의 체포를 기록함
- SEC가 단속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토큰 발행자(token issuers)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crypto exchanges)로 나타났고, 이는 거의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SEC 주장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분석

[SEC의 규제기업 분포현황]

구분	토큰발행자	거래소	투자 기업	중개인	기타
기업 수	11	6	7	2	4
비중	37%	20%	23%	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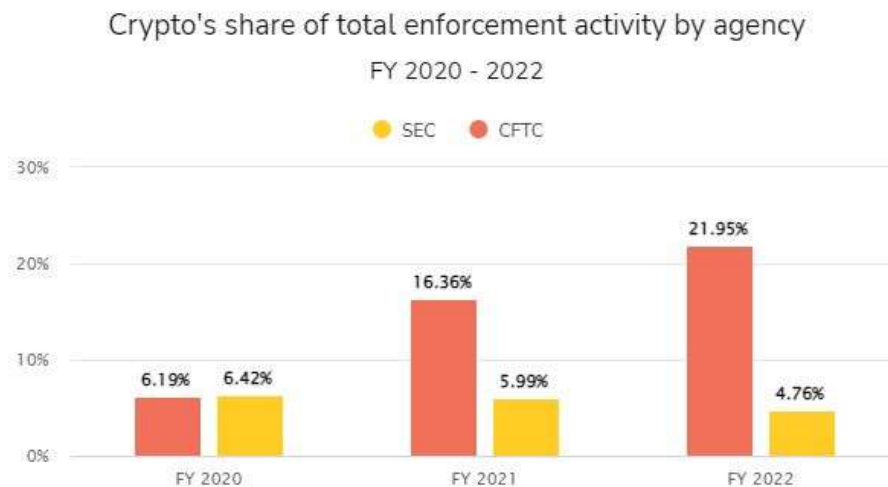
출처 : Solidus Labs, 2023 Crypto Enforcement Trends, 2022.2./

- SEC는 현재 엘비알와이(LBRY), 리플(Ripple), 와히(Wahi) 등과 암호화폐의 증권 인정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소송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됨
- **(LBRY)** 뉴햄프셔 지방법원 판사가 엘비알와이의 라이브러리 크레딧(LBC) 토큰 판매가 미등록 증권 공모(unregistered securities offering)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SEC 주장을 받아들임
- **(Ripple)** '20년 SEC가 리플의 XRP 판매는 투자 계약을 의미하므로 일종의 증권 제공이라고 강조하며 리플과 전·현직 CEO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함
- SEC 제소에 리플은 XRP가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투자 계약이 아니며, 거의 모든 XRP가 해외거래소에서 판매되어 SEC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
- *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대법원 판례
- 하반기 무렵 법원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며, 판결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요동칠 전망
- **(Wahi)** '22년 SEC는 코인베이스 직원이던 이산 와히(Ishan Wahi)와 동생, 동생 친구 등 3인이 불법적으로 거래한 암호화폐 중 9개가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내부자 거래위반 혐의로 제소
-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9개의 암호화폐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

▶ CFTC, '21년 이후 집행조치 급증세...탈중앙화 금융 및 탈중앙화 조직에 대한 소송 제기로 규제 대상 확대

- CFTC는 '15년부터 '22년까지 최소 49건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조치를 적용했고, 특히 '20년 이후 암호화폐 법 집행이 급증하고 있음
- '20년 회계연도에 CFTC는 총 113개 집행조치를 발표했고, 이중 암호화폐 관련된 사건은 7개(6%)에 불과했지만, '22년에는 총 82개 집행조치 중 18개가 암호화폐 관련 사건으로 비중이 22%로 상승함
- 같은 시기 SEC의 전체 활동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건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를 보임

[SEC와 CFTC 전체 규제 활동에서 암호화폐 사건 비중]



출처 : Solidus Labs, 2023 Crypto Enforcement Trends, 2022.2.

- CFTC는 '22년 19건의 집행조치를 발표해 '21년 11건 대비 73% 증가했고, '21년 1건에 그쳤던 체포가 '22년에는 4건의 체포로 증가함
- CFTC는 급성장하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규제에 집중해, '22년 9월 연방 규제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 CFTC는 디파이 플랫폼 Ooki를 운영하는 Ooki DAO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한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가 '비법인 협회(Unincorporated Association) 소속이기 때문에 Ooki가 CFTC의 상품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
- CFTC는 DAO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Ooki 포럼과 Ooki DAO 웹사이트 채팅창에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DAO 회원들에게 기소 사실을 통지
- '23년 1월에 디파이 플랫폼 망고마켓(Mango Market)*을 해킹한 에이브러햄 아이젠버그(Avraham Eisenberg)를 사기 혐의로 기소해 강력 규제를 이어감
- * 솔라나 기반 디파이 플랫폼으로 자체 토큰 MINGO를 소유한 탈중앙화 조직(DAO)이 운영하는 탈중앙화 거래소(DEX)

▶ OFAC, 다크넷·믹서 등 신규 서비스 규제...토네이도 캐시 규제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영향

- OFAC는 '21년에 5건을 기록한 집행조치가 '22년에는 8개로 증가했고, 새로운 암호화폐 서비스로 등장한

다크넷 시장, 비트코인 채굴자 및 암호 믹서*에 대한 제재에 착수

* 텀블러라고도 불리며,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전송자, 사용자, 현금화 여부 등의 익명성을 보장함

- OFAC는 초기에는 암호화폐 개인 주소 규제에 집중했으나, '20년부터 거래소 등 대규모 기관으로 대상을 변경했고 벌금 부과 등 적극적인 규제를 적용
- 특히 지난해 8월 OFAC는 이더리움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가 북한 해커 조직의 4억 5,500만 달러의 해킹 및 자금세탁을 지원한 혐의로 제재*에 나서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옴
 - * 미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와 연관된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함
- 토네이도 캐시는 '19년 8월 이후 76억 달러의 예치금을 받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서 강력한 반발이 제기됐고, 코인센터와 코인베이스 등이 OFAC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함
- 하지만, OFAC 제재 이후 대다수 스테이킹 풀이 새로운 이더리움 블록에서 토네이도 캐시 입출금을 제외했고, '23년 1월 22일 기준, 이더리움 신규 블록 중 71%가 OFAC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 FinCEN은 '15년부터 '22년까지 총 5건의 집행조치를 발표했고, 5건 사건 모두가 자금세탁 금지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한 은행비밀법(BSA)을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소 사례임
- FinCEN은 올해 규제 집행 속도 가속화를 위해 러시아 자금세탁에 대한 금지 조항 개정과 자금세탁방지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 강화를 추진할 방침

[OFAC의 주요 암호화폐 집행조치 이력]

구분	일시	기업 유형	집행 내용	벌금	이유
크라켄(Kraken)	2022.11	거래소	합의	362,158	이란 제재 회피 조장
블렌더(Blender.io)	2022.05	믹서	금전 제재	N/A	불법 거래 조장
비트리버(BitRiver)	2022.04	비트코인 채굴	금전 제재	N/A	러시아 제재 회피
가란텍스(Garantex)	2022.04	거래소	금전 제재	N/A	렌섬웨어 결제 지원
히드라(Hydra)	2022.11	거래소	금전 제재	N/A	러시아 불법 금융 지원
차텍스(Chatex)	2022.11	거래소	금전 제재	N/A	렌섬웨어 결제 지원
수엑스(Suex)	2021.09	거래소	금전 제재	N/A	렌섬웨어 결제 지원
비트페이(BitPay)	2021.02	거래소	합의	507,375	일반 제재 위반
비트코(BitGo)	2020.12	거래소	합의	98,830	일반 제재 위반

출처 : Solidus Labs, 2023 Crypto Enforcement Trends, 2022.2./

- 미 암호화 규제 당국은 지난해 총 58건의 집행조치를 발표해, '21년 대비 65% 증가했고, 특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0건의 집행조치로 전 세계 규제 당국 중 최다를 기록함
- CFTC는 탈중앙화 금융 및 탈중앙화 조직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고, OFAC는 다크넷, 믹서 등 최신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서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출처]

- Solidualab, 2023 Crypto Enforcement Trends: SEC & CFTC Set Records as States Take the Lead, 2023.02.02.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중국]

中, 암호화폐 금지 재고 의견 등장...디지털 위안화 활성화 방해 지적

- 암호화폐 금지, 자금세탁을 우려한 초기 단계 결정...이미 충분한 효과 거둬 새로운 접근 필요 강조
- 암호화폐 투자자의 해외 유출 등으로 디지털 위안화 확산에 악영향 경고,

베이징대 교수가 당국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이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위안화 확산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암호화폐 금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

▶ 중국 암호화폐 투자자, 싱가포르·UAE 등 해외 우회 투자로 선회...디지털 위안화 성장 정체에 영향

- 전 중국 인민은행(PBOC) 통화정책위원 출신 황이핑(Huang Yiping) 베이징대학교 교수가 암호화폐 금지가 실용적 정책이었지만, 디지털 위안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
- 황 교수는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는 자금세탁을 우려한 초기 단계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현재까지는 매우 실용적 결정이지만, 블록체인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암호화폐가 금지된 이후, 중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 등에 우회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투자자 해외 유출은 중국 디지털 위안화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경고
- 황 교수는 디지털 위안화가 '22년 12월부터 PBOC가 법정통화로서 정상적 공급을 시작했고, 기술적 부문에서 여러 도시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경기 침체로 채택이 크게 둔화했다고 평가
- '23년 설날 연휴 시범도시에서 거래된 디지털 위안화 총거래량은 1억 8,000만 위안(2,650만 달러)으로 '19년 12~'22년 8월까지의 주당 평균 7억 위안 거래와 비교해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지적
- 황 교수는 민간 부문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지원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허용 여부는 매우 민감한 문제지만, 디지털 위안화 활성화 측면에서 찬반 의견 모두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
- 이에 대해 반대 진영은 법정화폐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이 자금 도피 등 악의적 목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찬성 진영은 국경 간 거래비용을 낮추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라고 지지함
- 중국 국영 블록체인 네트워크(BSN) 운영사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정산 관련 기술 개발에 착수함

- 중국 인민은행 출신 베이징대학 교수가 중국 암호화폐 금지가 도입 효과를 충분히 거뒀다고 평가하고, 블록체인 가치가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 발굴을 위한 새로운 접근 모색을 주장
- 중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당국의 암호화폐 금지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우회 투자에 나선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흐름이 디지털 위안화 확산과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

[출처]

- South Chian Morning Post, "Chinese economist calls for review of rigid cryptocurrency ban as digital yuan fails to take off", 2023.01.30.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EU]

유럽 의회, 스마트계약 기술준수 및 적용 대상 등 대대적 규제 완화

- 새로운 스마트계약 규제안, 적합성 평가·의무선언 서명 비포함...규제 대상도 스마트계약 당사자로 축소
- 엄격한 접근제어와 영업 비밀 보호를 요구, 다른 유형의 계약과 동일한 법적 확실성과 보호 요구 전망

유럽 의회가 암호화폐 스마트계약 규제에서 적합성 평가 및 의무준수 선언 등을 포함하지 않고, 기술준수 규정도 대폭 완화해 EU의 정책 기조 변화에 관심이 집중됨

▶ 새로운 스마트계약 규제안, 적합성 평가·의무선언 서명 비포함...규제 대상도 스마트계약 당사자로 축소

- 유럽 의회가 암호화폐 스마트계약 규제에서 규제 강도를 대폭 낮춘 개정안 초안에 합의하고, 산업위원회 (industry committee) 채택을 앞두고 있음
- 유럽 의회 의원들은 EU 디지털 데이터 법 초안을 수정해 암호화폐 스마트계약의 까다로운 요구사항 중 일부를 완화했고, 적용 대상도 대폭 축소함
- 개정안 초안은 스마트계약 판매자 및 제공자에게 적합성 평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EU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는 의무선언에 대한 서명도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스마트계약 관련 표준 및 기술 규정 준수 사양도 낮아졌고, 규제 규정 적용 대상이 기존 스마트계약 개발 및 배포에 참여한 기업까지 포함하던 그룹 단위에서 스마트계약 당사자로 축소됨
- 그동안 EU는 스마트계약 규제를 EU 디지털 데이터 법에서 규제할 방침을 제시해왔고, 디지털 데이터 법이 공정경쟁과 엄격한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춰 스마트계약에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음
- 더 블록 등 블록체인 전문 매체는 EU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지만, 해당 규제에 암호화 규제를 위한 강력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
- 엄격한 접근제어 매커니즘과 영업비밀 보호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계약에서도 다른 형태의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법적 확실성 보장을 요구한다고 설명
-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 산업위원회 투표, 3월에 전체 투표가 예정되어 있음

- 유럽 의회가 EU 디지털 데이터 법에 포함된 암호화폐 스마트계약 규제에서 요구사항 및 규제 대상을 대폭 완화한 수정안을 합의해 스마트계약 규제에 대한 EU 정책 기조 변화에 관심이 집중됨
- EU가 일부 규제 강도를 완화했지만, EU 디지털 데이터 법은 스마트계약에 엄격한 접근제어와 영업비밀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암호화폐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

[출처]

- The Block, "EU eases regulatory burden for crypto smart contracts in draft legislation", 2023.02.03.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중국]

中 장안체인, 2억 4천만 TPS 지원..페타바이트 스토리지 오픈소스화 추진

- 장안체인, 중국건설은행 등 50여 개 국영기업으로 구성...고성능 칩 부하 분산 등으로 밀리 초 응답 구현
- 비즈니스 데이터 공유에 초점 맞춰 기능 개발 추진, 베이징시 80개 부서 2,700개 시스템 연결에 적용

중국 국영 장안체인(Chang'an Chain)이 대대적 확장을 통해 1,000개의 클러스터를 통해 초당 2억 4,000만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현재 오픈소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장안체인, 중국건설은행 등 50여 개 국영기업으로 구성...고성능 칩 부하 분산 등으로 밀리 초 응답 구현

- 장안체인은 중국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국가전망공사(the State Grid), 국영 식품회사 코프코(COFCO), 국영 통신사 차이나 유니콤(China Unicom) 등 50여 개 국영기업 생태계로 구성
- 장안체인은 '21년 96개 코어 칩의 병렬 실행으로 10만 TPS를 지원해 큰 관심을 모았고, 지속적 확장으로 이번에는 1,000개 클러스터와 2억 4,000만 TPS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짐
- 블록체인 전문 매체 레저인사이트는 대다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최대 1~2만 TPS 지원에 머무른 상황에서 장안체인은 칩의 부하 분산 기술과 SW·HW 조합으로 엄청난 속도를 달성했다고 분석
- 장안체인은 이런 성능을 바탕으로 밀리 초(milliseconds.) 수준에 블록체인 쿼리를 처리한다고 강조
- 장안체인은 '22년 11월 불변 스토리지 시스템(immutable storage system) '홍(Hong)'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페타바이트 규모 스토리지의 오픈소스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
- 이에 앞서 장안체인은 코드 일부가 아파치 2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함
- 레저인사이트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핵심은 비즈니스 데이터 공유 촉진이라고 지적하고, 장안체인은 공공 부문의 부서 간 정보공유에 장점이 있으며, 암호화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 기술 지원으로 ID 카드, 비즈니스 인증, 안면인식 등 민감한 데이터 처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
- '23년 2월 장안체인은 대규모 배포 중 하나인 베이징 디렉토리 2.0(Beijing Directory Chain 2.0) 체인을 출시하고, 베이징 80개 부서 2,700개 정보시스템을 연결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고 공개

- 중국 국영 50여 개사가 참여한 장안체인이 고성능 칩의 부하 분산기술과 HW와 SW의 조합을 통해 1,000개의 클러스터 운영과 2억 4,000만 TPS를 지원하고 있다고 공개
- 현재 밀리 초 이내에 블록체인 쿼리 응답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불변 스토리지 시스템 개발 완료에 이어, 현재 페타바이트 규모 스토리지의 오픈소스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출처]

- Ledger Insight, "China's huge homegrown blockchain ChainMaker starts to take shape", 2023.02.03.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英 재무부·영란은행, 디지털 파운드 협의문서 통해 CBDC 로드맵 공개
2. 글로벌 암호화 허브 경쟁, 전통 금융과 조세 제도가 좌우...1위는 런던
3. EU·독일은행협회, 암호화폐 단체 설립...인더스트리 4.0 가속화 추진
4. 美 SEC, 크라켄 증권법 위반 기소...양측,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합의
5. ChatGPT와 웹 3·분산원장 결합, 대화형 월렛 등 새 BM 등장 전망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영국]

英 재무부·영란은행, 디지털 파운드 합의문서 통해 CBDC 로드맵 공개

- '22년 조사, '23~25년 CBDC 디자인...'25년 이후 아키텍처 설계 등 구축 단계, 구축 여부는 추후 결정
- CBDC 도입 여부와 무관, 준비 작업 필요성 강조...공공·민간 장점 극대화할 소매 CBDC 플랫폼 제안

영국 영란은행(Bank Of England)과 재무부(HM Treasury)가 디지털 파운드 합의 문서(The digital pound: a new form of money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를 공개하고, CBDC 도입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착수를 발표

▶ 디지털 파운드, 현금 '대체' 아닌 '보완' 목적...중앙은행이 뒷받침해 본질적 가치 보유로 변동성 제거

- 영란은행과 재무부는 '22년부터 추진한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에 대한 협의내용을 공개하고, 미래에 디지털 파운드가 필요하고, 영국 시민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
- 재무부는 유로존·미국·중국 등이 유사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파운드는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와 달리 민간 부문이 아닌 영란은행이 발행하며, 이를 위한 별도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 디지털 파운드는 현금 사용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한다고 전제하고, 스마트폰 월렛에 보관해 현금 및 은행예금과 상호교환하고, 가정 및 기업이 상점 및 온라인에서 일상적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
-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디지털 파운드는 뒷받침하는 중앙기관(영란은행)이 있어, 본질적으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변동성이 없다고 설명
- 재무부는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현금 사용이 감소했고, 앞으로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디지털 파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디지털 파운드 시행 여부는 현금과 결제의 미래 발전상을 기반으로 2025년 무렵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

▶ 디지털 파운드 의견수렴, 편리하고 안전한 현금 접근성과 민간 부문 혁신·선택·효율성 지원 방안 모색

- 두 기관은 디지털 파운드 협의는 일상생활이 점점 디지털화됨에 따라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현금 접근성을 보장하고, 디지털 결제의 민간 부문 혁신·선택·효율성 지원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설명
- 제레미 헌트(Jeremy Hunt) 재무부 장관은 디지털 파운드는 신뢰할 수 있고, 접근과 사용이 쉬운 새로운 결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사전 조사를 통한 재정적 안정 보호를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설명
-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는 디지털 파운드는 새로운 결제 방법을 제공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금융의 안정성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
- 하지만, CBDC 도입을 반대하는 진영은 정부가 개인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지출 패턴 및 재무 행동 추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이날 공개된 협의 문서는 ▲디지털 파운드 제안(Our proposal for the digital pound) ▲디지털 파운드 필요성(The likely need for a digital pound) ▲통화 및 금융 안정성(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디지털 파운드 모델(Our model for the digital pound) 등 4개 부문과 결론으로 구성됨

▶ (Part A 디지털 파운드 제안) 도입 여부와 무관, 준비 작업 필요성 지적...디지털 파운드 플랫폼 제안

- 협의 문서는 미래에 디지털 파운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인프라 구축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
- 플랫폼 모델을 선택해 ▲디지털 파운드와 핵심원장(Core Ledger)을 포함한 중앙 인프라 제공(영란은행) ▲영란은행과 사용자 간 인터페이스를 월렛(pass-through) 형태로 제공(시중은행/민간기업) ▲월렛을 이용한 잔액 확인 및 결제, 전송 등 디지털 파운드와 상호작용(사용자)하는 형태를 제안
- 영란은행은 영국 디지털 파운드 모델에 대해 12가지 요소를 핵심 고려사항으로 제시
- 여기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가정 및 기업 비즈니스 활용 ▲중앙 플랫폼을 운영하는 영란은행이 발행 ▲현금과 은행예금 등 다른 자산과 완벽한 거래 ▲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월렛에 저장 ▲스마트폰 및 카드 접속 ▲카드 및 은행 계좌 보호 ▲무이자 ▲개인정보 열람 금지 ▲개인당 한도 설정 ▲영국 국내외 접속 ▲온라인 및 상점 결제가 포함됨

[영국 디지털 파운드 모델]

Our model for the digital pound	
 Public-private partnership	 Used by households and businesses
 Public digital money issued by a central platform operated by the Bank of England	 Seamlessly exchangeable with other forms of money, including cash and bank deposits
 Wallets to hold digital pounds offered by the private sector	 Accessed by users through smartphones or cards
 Privacy protected like for cards and bank accounts, but not anonymous	 No interest paid
 The Bank of England and the Government would not see any personal data	 Limited amount per user, at least initially
 Accessible to UK and non-UK residents	 For everyday payments online and in-store

출처 : BOE, The digital pound: a new form of money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2023.02

- 디지털 파운드는 민간 부문 혁신을 위한 공공 플랫폼 제공, 탄소 중립을 위한 정부와 은행의 약속 지원, 디지털 지폐처럼 사용, 물리적 현금과 구분 등을 제안
- 영란은행은 플랫폼 모델이 디지털 파운드 제공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 각각의 강점을 활용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으로 판단한다고 강조

▶ (Part B 디지털 파운드 필요성)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를 보장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안전장치 역할

- 협의 문서는 디지털 파운드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금을 활용해 금융시스템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닛(anchor) 역할과 민간 부문 혁신 촉진과 결제의 선택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
- 이외에도 디지털 파운드는 ▲추가 결제수단으로 금융시스템 탄력성 향상 ▲기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 보완 ▲국경 간 결제 개선과 같은 추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
- 영란은행은 현재보다 미래에 디지털 파운드의 필요성과 혜택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미래 금융에서 중앙은행 자금에 대한 접근성 유지와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
- 영국 경제와 통화시스템의 안정성은 화폐의 균일성에 의존한다고 지적하고, 모든 형태의 화폐(은행예금 및 현금)는 동일한 가치(액면가)며 공통 통화로 표시된다고 강조하고,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출현하더라도 디지털 파운드는 현금과 함께 통화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

▶ (Part C 통화 및 금융 안정성) CBDC 도입으로 통화 안정성 위험은 불가피...파장이 크지 않다는 사례 공개

- 협의 문서는 은행의 법적 목표는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유지와 경제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 제공을 포함한 통화 및 금융 안정성 유지라고 전제하고, 디지털 파운드는 통화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은행의 목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하지만, 디지털 파운드 도입은 금융시스템의 조정을 필요로 하고, 이는 은행 비즈니스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통화 정책의 전달 메커니즘 ▲통화 정책 시행 ▲생산성 등에서 통화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
- 디지털 파운드가 도입되면, 가계와 기업은 은행예금 일부를 디지털 파운드로 전환하게 되고, 이 때문에 상업은행 예금손실(은행 탈중개화)이 발생해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협의 문서는 2021년 은행 탈중개화 토론에서 논의됐던 시중 은행 소매 예금이 20%가 디지털 파운드로 이동할 경우, 은행 대출 금리는 기준 대비 20포인트 상승이 예상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
- 디지털 파운드 도입으로 인한 상업은행의 탈중개화 영향이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지만, 은행이 소매 예금 대신 도매 자금에 집중하고 의존도가 커지면 다른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
- 디지털 파운드가 전통적 통화 창출 채널을 바꾸지는 않지만, 통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

▶ (Part D 디지털 파운드 모델) 플랫폼 모델이 공공·민간의 장점 활용을 위한 최상의 메커니즘이라 강조

- 디지털 파운드 제공을 위한 플랫폼 모델을 제시하고, 실행 단계의 사용자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과 가정과 기업 사용 시 상호작용 방법을 제시
- 영란은행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위임(delegated) 모델* 대신 플랫폼 모델을 선택했다고 강조하고, 모델은 사용자 데이터 보호 및 상호작용을 위해서 사용자와 중개자 및 다양한 장치 간 호환이 중요하다고 강조
- * 고객 보유자산을 중앙은행 핵심원장에 저장(플랫폼 모델)하지 않고 개별 결제 인터페이스 공급자(PIP) 자체 원장에 기록하며, 동일 PIP를 사용하는 사용자 거래는 해당 PIP 원장에서, 서로 다른 PIP 사용자 거래는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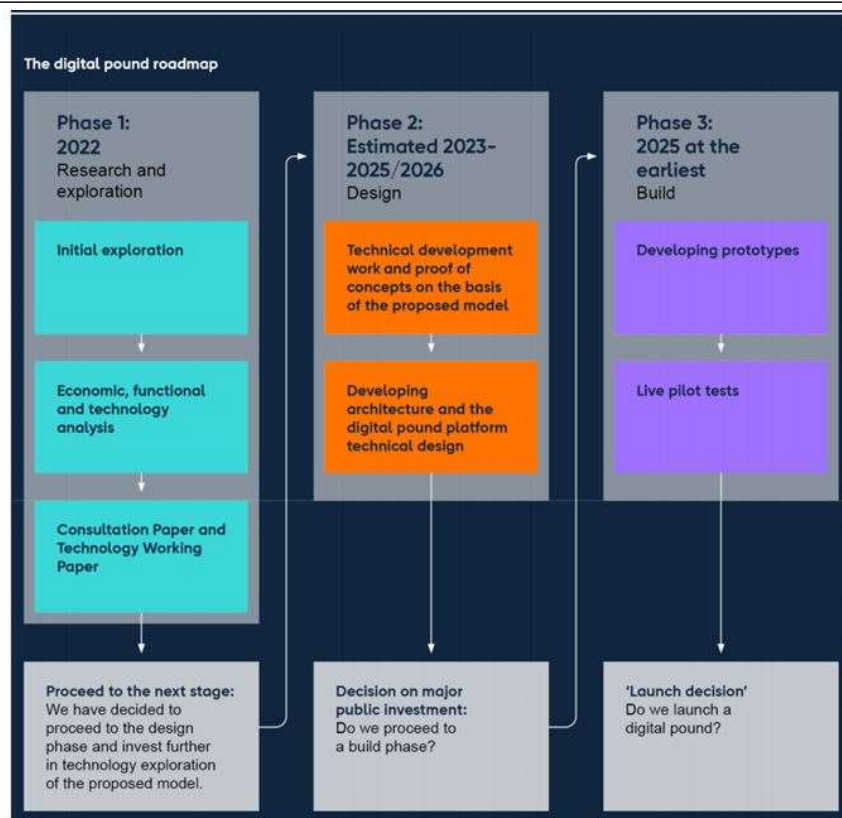
핵심원장에서 발생함, 위임 모델의 핵심원장은 서로 다른 PIP 간 저금 이동을 기록함

- 제안 모델은 가정과 기업의 일상적 결제를 위한 소매 CBDC로, 모델이 충족해야 할 일련의 기준을 제시함
- 모델은 중앙은행 자금이 통화 및 금융 안정성의 닛 역할을 위해 ▲재정적으로 위험이 없는 접근 ▲은행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직접 청구권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 완결성을 보장 ▲현금 및 은행예금과 상호 운용성 ▲혁신 및 효율성 지원을 위한 확장성 ▲미래 기술 수용을 위한 유연성을 보장해야 하고, 주요 국가 인프라에 대한 운영 표준을 준수하도록 함
- 디지털 파운드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5가지 목표를 제시
- 5가지 기준은 ▲정부나 은행은 일부 법 집행기관을 제외하고 다른 디지털 결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디지털 파운드 개인 데이터에 접속할 수 없고 ▲디지털 파운드는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사용자 식별이 필요해 익명을 지원하지 않고 ▲다양한 수준의 신원확인 및 월렛 제공으로 누구나 이용하고 ▲시스템 선택권을 부여하고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를 바탕으로 개인 데이터 공유로 더 큰 혁신 추구 등을 제시

▶ (결론) '22년은 조사 단계, '23~25년 디자인 단계...25년 이후 구축 단계, 구축 여부는 추후 결정

- 디지털 파운드는 현금과 공통점이 많아 ▲은행이 제공하며 ▲안전·간단하고 ▲사용이 편리하고 ▲쉽고 ▲저축이 아니므로 이자가 없다고 설명
- 디지털 파운드는 아직 도입이 결정되지 않았고, ▲현금 사용 감소 추세 ▲민간 부문 디지털 화폐 등장 속도 ▲기존 화폐 및 지불 방식과 상호작용 방식 등의 진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영국 디지털 파운드 3단계 로드맵]



- 이 때문에 디지털 파운드는 로드맵 확보가 중요하고,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개발 작업 강화와 필요 기술 구축과 기술 역량 배치가 필요
- 이를 통해 도입이 결정되면 적시에 디지털 파운드를 도입하고, 만일 디지털 파운드를 도입하지 않는 결정이 나더라도 기술 탐색 및 민간 부문 협력이 영국 핀테크 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
- 2022년까지는 조사 및 탐구 단계였고, 올해부터 디자인 단계에 속하며, 2025년 이후 구축(Build) 단계에서 디지털 파운드를 위한 포괄적인 아키텍처 개발과 관련 실험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개념 증명이 진행될 예정
- 영란은행과 재무부는 구축 단계의 진행 여부는 디자인 작업이 마무리되는 2025~2026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
- 디지털 파운드는 주요 국가 인프라가 될 것이며,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증거와 대중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

- 영국 재무부와 영란은행이 디지털 파운드 협의 문서를 공개하고, '22년 조사 단계를 거쳐 '23~'25년 디자인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히고, '25년 하반기에 디지털 파운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
- 영국 당국은 CBDC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CBDC 준비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과 민간 영역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매 CBDC 플랫폼 모델을 도입 모델로 제시하고 향후 로드맵을 공개

[출처]

- Gov.uk, 'The digital pound: A new form of money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2023.02.07.
- Bank of England, 'HM Treasury and Bank of England consider plans for a digital pound', 2023.02.07.
- Financial Times, 'Bank of England and Treasury Reveal Digital Pound Plans: Reaction', 2023.02.09.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글로벌 암호화 허브 경쟁, 전통 금융과 조세 제도가 좌우...1위는 런던

- 런던, 강력한 금융 인프라와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가 높은 평가...10%에 불과한 사용자 저변이 약점
- 소득세 면제 주크·싱가포르, 적은 도시 규모 불구하고 평가...홍콩·방콕 등 아시아 도시 상위 10위에 포함

암호자산 리포팅 플랫폼 리캡이 글로벌 암호화 허브 보고서*를 발표하고, 영국 런던을 암호화폐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글로벌 암호화 허브 1위 도시로 평가했고, 그 뒤를 두바이, 뉴욕이 잇고 있다고 분석

* recap, "The Rise of Crypto Hubs: Which Cities are Leading the way in Cryptocurrency Adoption?", 2023.1

▶ 암호자산 시장, 전통 금융시장과 밀접한 연관 속 성장..조세 관련 규제가 시장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 발휘

- 암호자산 리포팅 플랫폼 기업 리캡(recap)은 전 세계 암호자산 시장이 점점 전통 금융시장과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특히 암호화폐 세금과 관련 규제가 시장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
- 리캡은 외부 통계*를 인용해, 암호화폐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확산하여,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사용량이 400% 증가했다고 평가
- * statista, "Number of identity-verified cryptoasset users from 2016 to November 2022" 2023 Crypto Enforcement Trends:
- 2023년에도 ▲낮은 소유 비용 ▲익명성 ▲안전하고 빠른 거래 등과 같은 암호화폐 이점이 크게 주목받아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
- 가파른 암호화폐 사용 증가는 전 세계 도시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많은 도시가 암호화폐의 투자 및 혁신 잠재력 유치를 위해 암호화폐 허브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고 평가
- 글로벌 도시 간 암호화폐 허브 경쟁에서 세금 혜택 여부가 최대 이슈로 주목받았고, 각국이 암호화폐 세금 규제 정비에 발 빠르게 나서면서 국가별로 0~45%에 이르는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가 이뤄지고 있음
- **(영국)** '22년 4월 리시 수낙(Rishi Sunak) 재무부 장관은 영국을 암호자산 및 기술 투자를 위한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당국은 '23년 2월 암호화폐 규제 계획을 공개하고 검토에 착수함
- **(미국 마이애미)** 미국 마이애미는 스테이블코인을 최초로 도입한 도시 중 하나로, 비영리 단체 시티코인(CityCoin)이 발행한 디지털 코인 마이애미 코인(MiamiCoin)을 통해 700만 달러의 기부를 유치
- 마이애미 프란시스 수아레스(Francis Suarez) 시장은 공무원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고, 세금과 수수료를 디지털 통화로 결제하는 등 적극적인 디지털자산 도입에 나섬
- 이외에도 홍콩이 암호화폐 인프라 개발 계획을 공개했고, 미국 뉴욕시 에릭 아담스(Eric Adams) 시장은 뉴욕을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공개
- 이처럼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암호화폐 허브를 노리고 청사진을 공개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주도권을 확보한 곳은 아직 없다는 평가

▶ 8개 평가지표, 암호화 환경 1위 도시는 런던...두바이·뉴욕·싱가포르 등이 뒤를 이어 상위권 차지

- 리캡은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상대로 암호화 준비상태를 결정하는 8가지 지표를 통해 암호화 환경을 평가
- 8가지 지표는 ▲삶의 질 ▲암호화 행사 수 ▲암호화 관련 직업 종사자 수 ▲암호화 기업 수 ▲GDP 대비 R&D 비중 ▲암호화폐 ATM 수 ▲암호화폐 소득세율 ▲암호화폐 소유권 등으로 구성

[글로벌 암호화 허브 도시 순위]



출처 : recap, the Rise of Crypto Hubs: Which Cities are Leading the way in Cryptocurrency Adoption?", 2023.1

- **(런던)** 런던은 강력한 금융 인프라와 크게 활성화된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보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세계 최고의 암호화 허브 도시 자리를 차지
- 런던은 800개 이상의 암호화 회사가 자리 잡고 있고, 암호화 행사 및 컨퍼런스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호화 관련 직업도 다른 도시 대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
- 런던이 세계 최고 암호화폐 허브로서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11%만이 암호화폐를 소유/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 저변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음*
* 반면, 나이지리아 최대 도시 라고스(Lagos)는 암호화폐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했지만, 암호화 환경에서는 14위를 차지해 런던과 가장 대조적인 도시로 나타남
- **(두바이)** 두바이는 중동 지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중심지를 넘어 미래 디지털 경제 수도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2위로 평가됨
-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 기관(VARA)*은 지난 2월 암호화폐 규정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웹 3, AI, 메타버스에 기반한 미래 경제 수도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
- 두바이는 암호화폐 세금을 0%를 적용해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가 몰려들고 있으며, 772개 암호화폐 기업이 운영 중이라 암호화폐 관련 일자리도 풍부하며, 삶의 질도 전체 7위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뉴욕)** 뉴욕은 암호화폐 기업이 843개사에 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암호화

환경에서는 전체 3위를 기록

- 뉴욕은 R&D에서도 최다 투자가 이뤄지며, 암호화 관련 정보공유, 네트워크 형성, 구인·구직을 위한 크립토먼데이(Crypto Mondays)와 같은 이벤트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세 면제 주크·싱가포르, 적은 도시 규모 불구하고 높은 평가...홍콩·방콕 등 아시아 도시 상위 10위에 포함**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5%의 암호화폐 소유권이 인정되고, 800여 개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소득세를 면제함
-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는 최근 주 정부의 지원, 주 전역의 다양한 인재 풀, 상대적으로 높은 R&D 지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빠르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크)** 주크는 상위권에 있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소득세가 0%이며, 세금 납부를 암호화폐로 납부가 가능하고, 삶의 질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 홍콩, 파리, 밴쿠버, 방콕 등은 낮은 소득세, 암호화폐 사용 인구, 다수의 암호화폐 ATM 기기 등으로 상위 10위에 포함됨

[암호화 허브 평가 내용]

	도시	삶의 질 점수	암호화 이벤트	암호화 기업 수	R&D 투자 비중	소득세 비중
1	런던	134.67	57	808	1.71	20
2	두바이	175.84	20	772	1.45	0
3	뉴욕시	136.63	20	843	3.45	20
4	싱가포르	149.95	11	800	0.28	0
5	로스앤젤레스	137.96	36	323	3.45	20
6	주크	212.78	4	261	3.17	0
7	홍콩	104.59	32	251	0.99	0
8	파리	122.73	34	358	2.35	30
9	밴쿠버	173.05	7	140	3.63	33
10	방콕	81.21	2	57	1.14	0
13	삿포로	188.49	-	-	4.81	20%
14	라고스	48.29	6	112	0.13	10
19	오사카	160.73	9	-	3.26	20
20	쿠알라룸푸르	121.5	3	55	1.04	15
35	인천	154.34	6	-	4.81	45

출처 : recap, he Rise of Crypto Hubs: Which Cities are Leading the way in Cryptocurrency Adoption?", 2023.1

- 글로벌 도시 간 암호화폐 허브 경쟁에서 세금 혜택 여부가 최대 이슈로 주목받았고, 각국 조세 당국이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서 국가별로 암호화폐 소득세가 0~45%로 다양하게 형성됨
- 런던이 강력한 금융시장 및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등으로 글로벌 허브 1위 도시로 평가됐고, 두바이와 뉴욕이 뒤를 잇고 있으며, 싱가포르, 홍콩, 방콕 등 아시아 도시들이 Top 10에 포함됨

[출처]

- recap, "The Rise of Crypto Hubs: Which Cities are Leading the way in Cryptocurrency Adoption?" 2023.02.05.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EU/독일]

EU·독일은행협회, 암호화폐 단체 설립...인더스트리 4.0 가속화 추진

- 독일계 글로벌 은행과 유럽 대기업 20개사 참여...토큰화 기반 중개인 배제 새로운 기회 발굴 착수
- 메타버스 및 인더스트리 4.0 촉진 기대감 고조, EU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침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

EU와 독일은행협회(BdB)*가 공동으로 암호화폐 단체 'Tokenise Europe 2025' 설립을 발표하고, 유럽 지역의 토큰화 채택 촉진을 통한 글로벌 선두 도약과 인더스트리 4.0의 확산을 핵심 목표로 제시

* Association of German Banks(Bundesverband deutscher Banken) : 200개 이상의 민간 상업은행과 11개 협회를 대표

▶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20개사 참여, 메타버스·인더스트리 4.0 기회 모색으로 암호화폐 입법화 촉진 전망

- Tokenise Europe 2025는 독일계 컨설팅 기업 로랜드 버거(Roland Berger)가 지원을 발표했고, 현재 독일, 스페인, 리히텐슈타인 등지의 기업을 중심으로 20개사가 가입
- BBVA, 코메르츠뱅크(Commerzbank),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산탄데르(Santander) 등 4개 글로벌 은행과 다임러 트럭(Daimler Trucks), 르노(Renault) 및 렉솔(Repsol) 등 일부 대기업이 참여
- 또한, BdB와 협력관계에 있는 이탈리아 은행협회, 리히텐슈타인 은행협회, 스페인 국가 결제 네트워크 운영사인 이버페이(Iberpay), 프랑스 글로벌 결제기업 월드라인(Worldline) 등이 참여
- 로랜드 버거는 지난 1월 토큰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응답자 2/3가 토큰화가 자기 조직과 관련이 있으며, 응답자 절반이 유럽이 토큰화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강조
- 하지만 로랜드 버거는 EU가 ▲토큰화라는 장기 투자에서 투자 여력 부족 ▲보수적이고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 경향 ▲암호화폐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
- EU가 MiCA와 DLT 시범 적용 법안의 최종 승인으로 입법이 이뤄지고 있지만, 규제 지원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독일 현행법에서 M2M(machine-to-machine)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 등을 제시
- Tokenise Europe 2025는 토큰화가 중개인 배제로 대대적인 효율성 증대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을 촉진해 인더스트리 4.0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또 토큰화가 메타버스의 많은 기회를 주도할 것이며, 유럽은 주요 스포츠 기업의 본거지라는 점을 강조

- EU와 독일은행협회가 공동으로 암호화폐 단체 'Tokenise Europe 2025'를 설립하고,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프랑스 등의 글로벌 은행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20개사가 참여했다고 공개
- Tokenise Europe 2025는 유럽의 토큰화 도입을 촉진해 메타버스 및 인더스트리 4.0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을 앞당길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관련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

[출처]

- Ledger Insight, "Tokenise Europe 2025 initiative launched by EU, German banking association", 2023.2.8.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SEC, 크라켄 증권법 위반 기소...양측,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합의

- SEC,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미국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여부에 관심 집중
- 크라켄, SEC 주장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SEC 결정 수용...미 고객 자산의 스테이킹 중단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을 운영하는페이워드 벤처스(Payward Ventures)와 페이워드 트레이딩(Payward Trading)과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한 유가증권 판매 중단에 합의했다고 발표

▶ SEC,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미국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여부에 관심 집중

- 2023년 2월 9일 SEC는 크라켄의 운영사를 미등록 상태로 고객에게 암호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홍보 및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고, 크라켄과 SEC는 서비스 중단과 함께 3,000만 달러 벌금 지불에 합의
* 스테이킹은 가상자산 일정 지분을 특정 기간 예치하고 가상자산으로 보상받는 서비스
- 외신은 이번 합의가 코인베이스·바이낸스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SEC의 첫 번째 규제라는 점에 주목해,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의 중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됨
- 합의 발표에 앞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은 거래소가 스테이킹, 대출, 보상 등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이런 종류 수익을 제공하는 경우 연방 증권법에 따라 투자자가 보호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
- 겐슬러 의장은 스테이킹 제공업체는 SEC에 스테이킹 서비스를 등록하고, 고객에게 사용자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대다수 거래소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
- SEC는 고소장에서 크라켄이 2019년부터 일반 대중에게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 및 판매했지만, 투자자 보호와 정보공개를 소홀히 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하고, 해당 서비스의 영구 금지를 요청
- 크라켄은 SEC 주장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법원 승인에 따라 SEC 결정에 따르겠다고 동의
- 합의 후 크라켄은 성명을 통해 온체인 스테이킹 서비스 종료는 미국 고객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미국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한 자산은 자동으로 언스테이킹될 것이라고 언급
-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미국 소매 고객에 대한 스테이킹 금지는 신기술이 미국의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질식할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하고, 미국에 끔찍한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

-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운영사를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에서 투자자 보호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크라켄이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으로 합의에 도달
- 크라켄은 합의로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킹 서비스는 중단된다고 밝혔고,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질식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

[출처]

- sec.gov, "Kraken to Discontinue Unregistered Offer and Sale of Crypto Asset Staking-As-A-Service Program and Pay \$30 Million to Settle SEC Charges", 2023.02.09.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ChatGPT와 웹 3·분산원장 결합, 대화형 월렛 등 새 BM 등장 전망

- ChatGPT와 웹 3의 결합, 스마트계약의 완전 자동화 등 혁신 가능, 구글 시대 종말도 가능하다는 평가
- ChatGPT의 허위·유해·불공정 콘텐츠 확산 우려...블록체인 기반 모델 사전 교육 등으로 해결 가능

ChatGPT에 대한 높은 관심이 웹 3시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두 기술의 결합을 통해 언어 기반 검색기, 스마트계약 개발 도우미, 스마트계약 보안 테스트, 대화형 지갑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ChatGPT와 웹 3의 결합, 스마트계약의 완전 자동화 등 혁신 가능, 구글 시대 종말도 가능하다는 평가

- 코인데스크가 ChatGPT에 대해 최근 들어 가장 인상적인 기술로 평가하고, 인공지능 영역을 넘어 하나의 대중문화적 현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모호한 성격의 AI 기술로는 처음이라고 평가
- ChatGPT는 대규모 생성언어 모델(LLM)을 통해 콘텐츠 생성,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용자 경험 향상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조만간 출시 예정인 GPT-4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 관심이 집중됨
-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ChatGPT가 웹3 시장에서 주도적 아키텍처로 자리 잡으면, 스마트계약의 완전 자동화는 물론 인터넷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을 끝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또 일각에서는 ChatGPT를 플랫폼 기반 모델 혁명으로 구분하고, 이미 SW 생성 및 사용에 변화를 가져왔고, 분산 컴퓨팅 흐름과 결합하면, 새로운 모델 출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이미 언어 기반 탐색기(Language-based explorers), 스마트계약 개발 도우미(Smart contract development assistants), 지능형 NFTs, 대화형 월렛(Conversational wallets) 등의 제품이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됨
- 한편, ChatGPT의 문제로 지적되는 허위, 유해, 불공정 콘텐츠 확산 등 투명성 부족 문제를 블록체인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이용한 모델의 사전 교육 및 미세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 웹 3와 ChatGPT 결합은 기반 기술을 보유한 구글(LaMDA 사용), 딥마인드(Sparrow 사용), 안트로픽(Claude 사용), 스태빌리티AI(ChatGPT 오픈소스 사용) 등이 주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 ChatGPT와 결합을 통해 웹 3는 스마트계약, dapp, 디파이 프로토콜, NFT 생태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생성과 상호작용 방식 등에서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ChatGPT가 대중적 문화 현상으로까지 퍼진 가운데, ChatGPT의 투명성 및 신뢰 부족 문제가 블록체인 기반 웹 3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두 기술의 결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
- 웹3와 ChatGPT 결합은 언어 기반 탐색기, 스마트계약 개발 도우미, 지능형 NFTs, 대화형 월렛 등이 등장하고, 이를 ChatGPT 기반 기술을 보유한 구글, 딥마인드, 안트로픽 등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 coindesk, "A Pragmatic View of ChatGPT in a Web3 World", 2023.2.9.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EC,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발표..26년까지 매년 20개 사례 발굴
2. 美 SEC, 암호화폐 수탁규정 변경 제안..암호자산, 광범위한 규제 직면
3. 日, 4월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착수..수년간 모의 기업 거래 테스트
4. 소니 네트워크, 아스타와 공동으로 웹 3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발표
5. 아부다비 기술 생태계 '허브 71', 20억 달러 규모 웹3 프로그램 발표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EU]

EC,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발표... '26년까지 매년 20개 사례 발굴

- DLT, 금융 서비스 외 광범위한 산업에서 폭넓은 효용 보유...법적 불확실성 제거해 전 산업 확산 추진
- 개념증명 보유한 모든 산업, 모든 기업, 모든 인프라에 문호 개방...AI 샌드박스 등과 연계 방침

EU 집행위원회(EC)가 분산원장기술(DLT)의 혁신적 적용을 위한 이니셔티브로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향후 3년간 운영하며, 검증된 개념증명을 보유한 모든 공공기관 및 모든 산업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

▶ EC,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통해 DLT 법적 확실성 제고... '26년까지 매년 20개 사례 발굴해 지원 발표

- EC가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테스트 환경) 도입을 발표하고, 규제기관과 감독자를 한 축으로, 또 다른 축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두고 둘 간의 국경을 넘나드는 규제 논의의 진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
- 블록체인 샌드박스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The Digital Europe Programme)*의 자금 지원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운영되며, 매년 민간 및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개 프로젝트의 개발을 진행
 - * 기업, 시민, 공공기관의 디지털 기술 도입에 중점을 둔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체 예산이 75억 유로에 달하며 유럽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구체화하여 모든 사람, 특히 중소기업에 혜택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함
- EC는 블록체인 샌드박스가 규제 당국 간 협업을 위한 범유럽 프레임워크(a pan-European framework)를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률적 규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강조
- EC는 DLT와 블록체인이 암호자산의 핀테크 앱이나 증권의 거래 비용 절감 등에 널리 사용되지만, DLT가 금융 서비스 외에도 위조 퇴치, 자격증명 검증 등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폭넓은 효용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DLT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
- 일부 선도기업이 충분한 잠재력을 증명했지만, 각종 거버넌스와 규제 장벽으로 아직까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블록체인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
- EC는 법적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이니셔티브 핵심이며, DLT 샌드박스가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규제기관과 개발자·혁신가 간 대화 촉진으로 모범사례 창출을 기대
-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는 다른 관련 규제 샌드박스 프레임워크와 연계 방침을 밝히고, 특히 EU 디지털 금융 플랫폼과 AI 법에 따라 설립된 AI 샌드박스와 협력해 혁신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겠다고 강조
 - * EU Digital Finance Platform : EU 금융시스템 혁신과 디지털 금융 단일시장 구현을 목적으로 한 민간·공공 협의체

▶ (개요) 블록체인과 DLT, 금융 서비스 외에도 폭넓은 효용 보유...법적 불확실성 해소해 확산 도모

- (정의) 유럽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분산원장기술과 관련된 혁신적인 사용 사례를 위한 EC의 이니셔티브라고 정의하고, ▲규제기관, 감독 당국, 블록체인 개발자 간 규제 토론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규제 장벽을 식별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탈중앙화 솔루션의 법적 확실성을 높이는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제시

- 가령, EU 공공기관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위조를 방지하고 사기로부터 검증이 가능한 자격 증명(예: 교육 학위)을 도입할 수 있고, 기업은 ▲알고리즘 교육 등에서 非 개인 데이터 교환 ▲에너지 구매 및 재판매 ▲보험 자산에 대한 디지털 트윈 생성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
-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기관과 감독 당국은 최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블록체인 기업은 안전하고 기밀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법률 자문, 규제 경험, 지침 등을 받음
- 두 집단의 규제 관련 논의는 산업 전 분야와 세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블록체인 및 DLT 기술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블록체인 산업을 둘러싼 규제 및 법적 문제 식별에 활용
- 2023년부터 매년 20개 블록체인 서비스를 선정해 지원하며, ▲모든 블록체인 인프라 수용 ▲검증된 개념증명을 보유한 모든 기업(스타트업, 스케일업 포함), 모든 산업을 수용하며, 비유럽 기업도 참여 가능
- 샌드박스 운영은 지난해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로펌 버드앤버드(Bird & Bird), 컨설팅 기업 옥시지(OXYGY), 블록체인 전문가 집단 WBNoDE, 웹 디자인 기업 스피독스(Spindox)가 진행
- 샌드박스 접수는 4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비즈니스 성숙도 ▲법적/규제적 관련성 ▲EU 정책 우선순위 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버드앤버드와 로만 벡(Roman Beck) 교수(코펜하겐 IT-University), 소울라 루카(Soulla Louca) 교수(키프로스 이코시아 대학) 등 독립적인 유럽대학 전문가 패널이 감독

▶ **(지원 기업) 개념증명 보유한 모든 산업 모든 기업에 문호 개방...非유럽 기업도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샌드박스는 검증된 개념증명을 보유한 기업(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포함)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함
 - 샌드박스에 제안한 프로그램이 유럽에 있는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 비유럽 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블록체인 인프라가 참여할 수 있고, 신청자는 6개월 이상 EEA 회원국에 등록된 법인 서류와 검증된 개념증명(사례연구, 재무정보, 결과문서, 보도자료 등)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별도 수수료는 없음
 - 신청자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사례를 공유한 컨소시엄, 협회, 그룹 일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경우, 신청자는 컨소시엄을 대표할 권한을 보유해야 함
 - 샌드박스는 특정 블록체인 인프라에 국한되지 않으며, EBSI*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배포한 서비스도 샌드박스에 참여할 수 있음
- * European Blockchain Services Infrastructure : 2018년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등 29개국이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 (EBP)을 맺어 출범한 유럽 블록체인 기구로 보안, 개인정보보호, 지속가능성, EU 법률 준수 등 유럽 가치와 표준에 부합하는 블록체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유럽 인프라를 구축

▶ **(지원 혜택) 기업, 규제 당국과 솔루션 규제 문제 해소...당국, DLT 및 규제 최신 이슈에 대한 이해 향상**

- 샌드박스는 EU 및 각 회원국 차원에서 블록체인 혁신 기업과 규제 당국 간 규제에 대한 논의 활성화를 통해 법적 확실성 제공을 목표로 함
- **(기업)**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시연하고, 규제기관과 감독 당국으로부터 규제 지침 및 법적 확실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법률 전문가 자문 제공 ▲범유럽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규제 관련 포괄적 이해 제고 ▲평판 및 네트워크 확보 ▲가장 관련이 깊은 국가 규제 당국과 연결 등이 제공
- **(규제기관)** 국가 규제기관과 감독 당국은 샌드박스를 통해 다른 EU 및 국가 규제 당국과 국경을 초월한 환경에서 국가 차원의 규제 문제를 논의해 모범사례 및 통찰력을 개발할 수 있음
- 규제 당국은 자국 상황과 밀접한 사용 사례에 대한 논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및 DLT 관련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매년 모범사례 보고서를 발행해 참여 규제기관과 감독기관 활동을 공유하고, 가장 혁신적인 규제기관을 별도 선정해 시상할 계획

▶ **(지원 프로세스) 법률 평가로 규제 문제 발생 가능성 진단, 규제 당국과 2회 샌드박스 미팅으로 문제 해소**

- 샌드박스는 사전 법률 자문, 규제 당국 논의(2차례), 피드백 제출과 같은 간소화된 프로세스로 운영
- 선정된 사용 사례는 먼저 서면 법률평가 방식으로 법률 자문이 제공되며, 사용 사례와 관련된 국가 및 EU 법률 확인이 이뤄져 특정 규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진단
- 다음 단계는 사용 사례 소유자, 참여국 규제기관, EU 규제기관 간 두 차례의 샌드박스 회의를 개최
- 회의에는 화상으로 진행되고,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버드앤버드 법률 전문가가 회의에 참여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회의 과정에 교환되거나 작성된 모든 문서는 기밀 보호가 적용되어 참석자만 열람
- 샌드박스 운영이 종료되면, 사용 사례 소유자와 규제기관은 각각 피드백 양식에 따라 논의 내용과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논의 규제) 건강, 환경, 무역 등 산업 이슈와 각 지역 규제 포괄, 새로운 법률 및 규제 문제에 중점**

- 샌드박스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광범위한 블록체인 사용 사례를 대상으로 하며, 여러 산업과 지역 관련 규제 관련성이 있는 주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고 강조
- 특히 새로운 법률 및 규제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신원, 사이버보안, 소비자 보호, 경쟁법,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관련 스마트계약, 자금세탁방지, 고객 알기 제도 등을 포괄할 방침
- 또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건강, 환경, 무역, 모빌리티, 에너지, 금융 및 기타 주요 산업 부문별 규제를 모두 다룰 방침

▶ **(향후 계획)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와 EU 디지털 금융 플랫폼 및 AI 샌드박스 연계 방침**

- EC가 이번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를 EC가 추진하는 각종 이니셔티브 및 규제 프레임워크와 상호보완 및 융합을 강화할 방침
-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다양한 산업의 혁신적인 블록체인 솔루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및 잠재적 법적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춤

- **(AI 규제 샌드박스)** AI 법(COM(2021)에 따라 EU 전역에 설립될 예정으로,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AI 시스템의 개발, 검증, 테스트를 위한 통제된 규제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함
- **(EU 디지털 금융 플랫폼)** 블록체인 등 혁신적인 금융 기업에 국가 간 테스트를 포함해 각국 금융 감독기관에 대한 단일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
-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된 블록체인 서비스 및 사용 사례는 EU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통해 관련 금융 감독기관과 연결될 수 있고, AI 샌드박스와의 협업도 가능
- 각종 산업에서 혁신 기술의 융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니셔티브 간 긴밀한 협업은 경험과 통찰력 공유와 시너지 창출에서 끌어내는 효율적 접근이라고 강조

▶ **(운영 주안점) 서면 정보 및 문서 교환을 위한 액세스 플랫폼 지정, 사용 사례 소유자의 지식재산권 보장**

- 샌드박스 운영 중 서면 정보 및 문서 교환은 액세스 플랫폼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고, 정보 공유 및 통신을 위한 버드앤버드의 보안 플랫폼 투버드엑세스(Two Bird Access)를 액세스 플랫폼으로 지정
- 모든 샌드박스 참가자는 전자메일 주소로 액세스 플랫폼 접속을 위한 계정을 생성하고, 액세스 사용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의를 의무화함
- 샌드박스에 참여하더라도 사용 사례 소유자는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기존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며, EC는 샌드박스 권리서비스 모델(CNCECT/2021/Op/0019)로 해당 지식재산권을 이용함

▶ **EC, DLT 금융거래 지침 확장 및 3월 DLT 파일럿 착수 예정..DLT 효용 증명 통한 확산 저변 마련 목적**

- EC는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외에도 2022년 12월 DLT 기반 금융거래에 대한 EU 지침*을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등 DLT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 EU 금융시장 규제기관인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는 2022년 12월 15일 DLT 시장 인프라 운용 허가 신청을 위한 표준 템플릿, 양식, 이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 지침에는 DLT 파일럿 규정(DLTR)에 따라 모든 유형의 DLT 시장 인프라 운영을 위한 요구 사항이 담겼으며, 2023년 3월 23일 발표 예정임.
- EC는 DLT 금융거래가 주식, 채권, 기타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중개인을 배제하지만, 이를 통해 소매 투자자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려해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이를 확인할 방침*
- * DLT 플랫폼 사용자가 투자은행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 국가 관할 당국에 DLT에 대한 충분한 지식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전문 교육 등을 명확히 알리도록 함

- EC가 블록체인과 DLT의 혁신적 적용을 위해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2026년까지 매년 2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한 블록체인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고 발표
- EC는 규제 샌드박스를 EU 디지털 금융 플랫폼과 AI 샌드박스 등과 연계해 경험 및 통찰력 공유 등으로 혁신 기술 융합을 촉진할 방침이며, DLT 금융 지침 확정 등으로 DLT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출처]

- European Commision, 'Launch of the European Blockchain Regulatory Sandbox', 2023.02.14.
- Coindesk, 'EU Now Accepting Applications for Its Blockchain Regulatory Sandbox', 2023.02.15.
- Fintechfuture, 'European Commission launches blockchain regulatory sandbox', 2023.02.2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美 SEC, 암호화폐 수탁규정 변경 제안...암호자산, 광범위한 규제 직면

- 고객자산, 펀드와 증권에서 암호자산 전반으로 확대...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강력 규제 직면
- 소규모 투자사에 광범위하고 고비용 규제 적용, 기존 기업 퇴출 및 신규 기업 진입장벽 작용 우려

미 SEC가 투자자문법*에 규정된 연방 수탁 규정(Federal Custody Rule)을 수정해 고객자산에 암호화 자산을 일괄 포함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수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

* Safeguarding Advisory Client Assets, Investment Advisers Act.

▶ 고객자산을 기존 펀드와 증권에서 암호자산 전반으로 확대...암호화폐 수탁 프로그램 규제 강력 규제 직면

- SEC가 연방 수탁 규정(투자자문법*)에 암호자산을 펀드나 증권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자산에 포함하고, 암호화 기업은 고객자산 보유에 대한 새로운 등록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탁규정 수정을 제안
- 개정안은 고객자산을 투자 자문사(investment advisor)가 수탁하는 모든 자산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SEC 내부 심의를 4:1 투표로 통과함
- 현 연방 수탁규정은 펀드나 증권 등이 고객자산으로 분류되어, 피델리티나 메릴린치 등과 같은 자문사는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고객자산을 연방 또는 주 정부가 인정한 은행에 보관토록 함
- 개정안은 투자자문사의 물리적 자산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부동산, 대출 및 기타 새로운 자산 영역 전반에 걸쳐 고객자산 관리 및 보호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
-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헤지펀드나 은퇴한 투자 매니저를 통해 고객 자산가를 상대로 수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제하려는 SEC의 노골적인 시도라는 평가
- 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은 성명에서 일부 암호화폐 거래·대출 플랫폼이 투자자 암호화폐의 수탁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그들이 자격 있는 수탁 업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의지를 드러냄

▶ 수탁규정 개정 필요성은 모두 공감, 암호화폐에 집중된 규제 불균형 지적...거센 후폭풍 전망

- 미국 금융계는 현행 수탁규정이 2009년에 마지막 개정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기술, 자문 서비스, 수탁 관행 등이 크게 발전한 만큼 개정 필요성이 높았다는 반응
- (변경 내용) 새 규정(Rule 223-1)은 현 수탁 규정(206(4)-2)을 수정해 ▲고객자산을 펀드와 증권뿐 아니라 자문 계정에 보관된 모든 고객자산에 적용되도록 확장하고 암호화 자산은 펀드 또는 증권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되도록 변경
- 고객자산 투자자문사는 공인 수탁사(qualified custodian)를 통해 고객자산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하며, 자산 유지(maintain)를 위해 공인 수탁사는 고객자산을 소유 또는 통제해야 하며, 고객자산의 수익 소유권

변경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

- 이때 자문사는 공인 수탁사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사 과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배상한다는 내용과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9가지 조항에 대해 합리적인 보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 자문사는 공인 수탁사에 다른 독점자산과 명확하게 식별 및 분리하며, 수탁사 파산 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독립 계정(bankruptcy-remote accounts)에 보관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
- 또, 사모 증권(privately offered securities)에 대한 예외를 신설해 자문사의 공인 수탁사 유지 요건을 분명히 하고, 고객자산을 거래하는 자문사의 재량적 권한을 수탁 정의에 포함하도록 함
- **(적용 대상)** 개정안은 투자자문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자문사와 등록이 필요한 자문사 모두에 적용되며, 보고 면제 자문사와 역외 자문사의 非미국 고객 계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 * 이미 등록된 투자자문사는 규정 변경에 따라 새로 등록할 의무가 없음
- 개정안은 규제 적용에서 현 규정의 수탁 정의를 유지하고 있어, 자문사가 고객자산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 적용됨
- 이는 자문사가 고객자산에 접근, 통제하거나 고객자산의 수익적 소유권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또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의미
- **(수탁 범위)** 새 규정은 현 규정과 동일하게 수탁 사례를 ▲물리적 자산 소유 ▲약정을 통해 자문사가 고객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및 허용 ▲자문사에 증권에 대한 법적 소유권 및 접근에 대한 모든 권한 부여와 같은 세 가지 범주로 정의
- **(적용 자산 범위)** 현행 규정에서 고객자산은 자문사가 관리하는 고객 계좌에 보관된 현금과 증권에 적용되지만, 새 규정은 ▲암호화 자산 및 상품, 기타 실물자산 ▲서면 옵션 등 일반 회계 대차대조표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투자 목적의 파생상품 ▲미술품, 부동산, 귀금속 등 물리적 자산에 적용
- **(공인 수탁사)** 기존 규정을 따라 ▲은행 또는 저축협회(신탁회사 포함) ▲등록 브로커 및 딜러 ▲등록 선물 커미션 판매자 ▲특정 유형의 외국 금융기관*으로 규정
 - * 추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정안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요구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짐
- 현행 규정과 달리 이들 공인 수탁사는 자문사와의 서면 계약에 따라 고객자산의 소유 또는 통제 권한을 획득한 경우에만 수탁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됨
- **(서면 계약)** 자문사와 수탁사는 서면 계약을 통해 수탁사가 고객자산의 소유 또는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때 자문사가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4개 안전장치를 요구하도록 규정
- SEC가 제시한 4개 안전장치는 ▲요청 시 SEC 또는 독립 감사관에게 즉시 기록 제공 ▲계정에 보관된 각 고객자산을 식별하고 모든 거래를 요약한 계정 명세서를 고객(또는 대리인)에게 전송 ▲최소 1년에 한 번 자문사에 서면 내부통제 보고서 제공 ▲보관계정에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자문사의 합의된 권한 및 관련 제한사항 지정으로 명시
- **(관리 불가 자산)** 개정안은 물리적 자산 및 특정 사모 증권은 공인 수탁사가 유지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객자산 유지 관련 예외로 인정

- **(고객자산 소유 및 통제)** 수탁사는 투자사와 서면 계약에 따라 고객자산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경우에만 공인 수탁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하지만, 수탁 관점에서 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명확하고 동일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SEC도 이를 인정함
- **(기록관리 규정)** SEC는 기록관리 규정을 대폭 개선해 ▲필수 고객 통지 사본 보관 ▲모든 계좌 개설 기록의 사본과 자문사 재량 권한 보유 등 정보를 기록으로 작성 및 보관 ▲특정 수탁사 계약 및 서면 보증 정보의 생성 및 보관 ▲투자사의 고객자산 보관 근거 정보를 생성 및 보관 ▲모든 계좌 명세서 사본 ▲모든 인가서 사본 ▲독립 회계사 고용 및 관련 기록 보관을 명시

▶ **암호자산, 광범위한 규제 대상에 포함...기존 서비스 업체의 퇴출과 신규 기업 진입장벽으로 작용 전망**

- 새로 제안된 규정은 특히 디지털자산 수탁과 관련해 투자자문사와 수탁 자격을 보유한 기업에 새로운 고민과 과제를 안겨준다고 평가하고, 특히 암호화 자산이 광범위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잠재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
- 미 금융계는 이번 제안이 기술 및 시장의 진화로 고객자산 수탁이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수탁규정의 근간인 보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원론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이 때문에 현행 수탁규정의 일부 조항과 관련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 하지만, 새 규정이 소규모 투자자문사에 광범위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규정 준수를 요구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자문사와 수탁사 기능을 크게 변화시켜 투자 관리 수탁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의 퇴출을 유도할 것으로 우려
- 특히 자문사와 수탁사 간 관계 및 여기에 적용되는 새로운 계약 요건 등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제기될 전망
- SEC 내부 투표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해리스 퍼스(Hester Peirce) 커미셔너는 공인 수탁사로부터 서면 보증을 받는 규정의 실행 가능성을 지적
- 또한, 퍼스 커미셔너는 SEC가 규제하지 않는 단체, 즉 이미 자격을 보유한 수탁 업체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
- SEC는 '암호화 자산은 유가증권'이라는 겐슬러 의장의 주장을 반영해 대부분의 암호화 자산이 현 규정이 적용되는 자금 또는 암호화 자산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일괄 적용을 방침을 공개적으로 강조함
- SEC는 암호자산 업계의 강한 반발에 대해 고객자산이 적절하게 분리되어 공식 수탁사의 파산 또는 지급 불능 사태에서 고객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 SEC가 암호화 자산의 고객자산 포함을 골자로 한 연방 수탁규정 개정안을 제안하고,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대한 규정 강화에 나섰고, 업계를 중심으로 법안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업계는 암호자산이 광범위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기존 기업과 퇴출과 신규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이럴 경우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진다고 경고

[출처]

- CNBC, 'SEC proposes rules that would change which crypto firms can custody customer assets', 2023.2.15.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일본]

日, 4월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착수...수년간 모의 기업 거래 테스트

- 일본은행, 신임 총재 취임과 동시에 CBDC 파일럿 착수 발표...공격적인 정책 변화 가능성 고조
- 추후 CBDC 디자인 개선 및 소매기업과 소비자 간 테스트 진행도 염두...G7과 협력 의사 언급

일본은행(BOJ)이 4월부터 CBDC 파일럿 프로그램 착수를 발표하고, 수년간 일정으로 민간 기업과 모의 거래가 수행되며, 상업은행뿐 아니라 통신사, 非 은행 결제기업 등이 참여한다고 설명

▶ BOJ, 신임 총재 취임과 동시에 CBDC 파일럿 착수...추후 디자인 개선 및 소매 거래 테스트도 가능 언급

- 로이터 등 외신은 BOJ의 CBDC 파일럿 착수 발표는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CBDC 연구에서 널리 예상됐던 움직임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이 디지털 엔화 발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
- 또한, 4월 8일 임기가 끝나는 구로다 하루히코(Haruhiko Kuroda) 총재 뒤를 이을 우에다 가즈오(Kazuo Ueda) 신임 BOJ 총재가 취임과 동시에 CBDC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점 등에서 관심이 집중됨
- 당초 마사요시 아마미야(Masayoshi Amamiya) 부총재의 승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BOJ 통화 정책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강경론자로 알려진 우에다 전 이사가 총재로 지명됨
- BOJ는 시범 프로젝트는 수년간 일정으로 제한된 테스트 환경에서 민간 기업과 모의 거래가 수행하며, 상업은행뿐 아니라, 통신사, 비은행 결제기업 등이 참여한다고 공개
- BOJ의 CBDC 책임자 우치다 신이치(Shinichi Uchida) 전무는 민간 기업과 회의에서 시범 프로젝트가 활발한 협력을 통해 CBDC 디자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BOJ는 CBDC 발행 일정 결정에서 다른 선진국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매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 테스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과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
- G7 그룹은 '21년에 CBDC가 은행의 통화 및 금융 안정성 의무 이행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며, 관련 기능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음
- 로이터는 일본이 CBDC 개발을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최일선에 있었고, CBDC 소매 결제에 강점을 가진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

- 일본은행이 4월부터 CBDC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해 수년간 일정으로 상업은행, 통신사, 비은행 결제 기업 등 민간 기업과 모의 거래를 수행할 방침이라고 발표
- BOJ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CBDC 디자인 개선으로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CBDC 관련 일정은 G7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언급

[출처]

- Reuter, 'Japan to launch pilot programme for issuing digital yen', 2023.2.17.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일본]

소니 네트워크, 아스타와 공동으로 웹 3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발표

- 소니·아스타, 전 세계 개발자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개...DAO·NFT 활용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방침
- 소니, '22년 11월 메타버스 제품 출시해 웹 3 시장 진입...파트너십 통해 솔루션 개발 및 투자 기대

소니 그룹의 기술 제공기업인 '소니 네트워크'와 폴카닷 혁신 허브인 '아스타 네트워크'가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웹 3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

▶ 소니·아스타, 전 세계 개발자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개...DAO·NFT 활용에 초점을 두고 중점 지원할 방침

- 프로그램은 일본인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펜부시 캐피탈, 드래곤플레이, 알케미 벤처스 등 벤처캐피탈도 참여해 교육 세션을 진행할 계획
- 특히, 양사는 싱가포르의 웹 3 전문기업인 스타테일 랩스(Startale Labs)와 협력해 탈중앙화 조직(DAO)과 NFT 활용에 초점을 맞춘 웹 3에 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
- 양사는 모든 프로젝트 구성원에게 필요한 기술 지원, 리소스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세계적 수준의 웹 3 기업과의 직접적인 연결 및 피드백을 보장한다고 강조
- 소니 네트워크는 현재 블록체인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적용 가능한 웹 3 솔루션 개발을 기대하며, 참가 기업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고 언급
- 아스타 네트워크는 NFT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참가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용 사례와 프로젝트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
- 이번 이니셔티브는 최근 활발해진 웹 3 기술 확산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 속에, 일본 정부가 관료 조직의 느린 의사결정 개선을 위해 웹 3와 DAO에 집중하는 최근 추세가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음
- 소니는 '22년 11월 스마트폰과 센서를 이용해 아바타 영상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모션-트래킹 메타버스 웨어러블 제품 모코피(Mocopi)를 출시해 웹 3 시장에 진입
- 차세대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평가되는 파라체인(parachains) 가운데 폴카닷에 처음 등장한 아스타는 최근 웹 3 해커톤 대회에서 도요타와 공동으로 개인증명 DAO 도구 개발을 추진함

- 소니 네트워크가 블록체인 혁신 허브 아스타와 공동으로 전 세계 개발자를 대상으로 웹 3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특히 NFT와 DAO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짐
- 소니는 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웨어러블 제품을 출시해 웹 3 시장에 진입했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십 강화와 혁신 기업 투자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

[출처]

- Crypto Potato, 'Sony Network and Astar Network to Co-Host a Web3 Incubation Program', 2023.2.18.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UAE]

아부다비 기술 생태계 '허브 71', 20억 달러 규모 웹3 프로그램 발표

- 스타트업 200개 보유한 기술 생태계 '허브 71', 구축 노하우 살려 웹 3 중심 서브-허브 생태계 구축
- 아부다비, 디지털자산의 비석유 GDP 20% 달성이 목표...건강, 기후 생태계 등으로 확대할 방침

아부다비의 글로벌 기술 생태계인 '허브 71'이 웹 3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웹 3 이니셔티브를 공개하고, 약 20억 달러 규모로 운영되며, UAE에 다양한 혁신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

▶ 스타트업 200개 보유한 기술 생태계 '허브 71', 구축 노하우 살려 웹 3 중심 서브-허브 생태계 구축

- 이번에 공개된 '허브 71 + 디지털자산' 이니셔티브는 스타트업 기업에 벤처캐피탈, 고객, 기술제공기업 개발자, 블록체인 플랫폼,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결을 지원한다고 강조
- 허브 71 전략 책임자는 새로운 생태계 중심축은 Hib 71, ADGM, 퍼스트아부다비뱅크 등이며, 스타트업에 아마존의 웹서비스, 마스터카드의 결제서비스, 바이낸스의 디지털자산 보관서비스 등이 제공된다고 설명
- 책임자는 '허브 71'이라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춘 하위 허브(Sub Hub)를 구축했다고 강조하고, 초기 단계에 20억 달러가 투자된다고 언급
- 아부다비 정부와 국부 펀드 무바달라 투자회사(Mubadala Investment Company)가 지원하는 Hub 71은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19년 출범 이후 30개 VC로부터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함
- 이니셔티브 선정 기업에 15만 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며, VC 파트너를 통한 자금 조달 및 기술 파트너를 통한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허브 71의 글로벌 파트너십 등이 지원될 예정
- 아흐마드 알리 알완(Ahmad Ali Alwan) 허브 71 부사장은 이번 이니셔티브는 아부다비가 글로벌 수준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파괴적 비즈니스에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
- 알완 부사장은 스타트업 기업에 플랫폼 구축 인력은 물론 진보적인 규제 환경을 보유한 아부다비 규제 당국이 실제 심사를 제공해 비즈니스와 투자자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고 강조
- 허브 71은 이번 웹 3 서브 허브 구축은 아부다비 非석유 국내 총생산(GDP)에서 디지털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10년 이내에 20%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

- 아부다비가 웹 3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허브 71+디지털자산' 이니셔티브를 공개하고, VC의 자금 지원, 기술기업의 인프라 지원, 규제 당국의 실제 심사 등이 제공된다고 설명
- 허브 71은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아부다비의 비석유 국내 총생산에서 2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웹 3 외에 건강기술 및 생명과학, 기후기술에 특화된 생태계를 추가 공개할 방침

[출처]

- The National News, 'Abu Dhabi's Hub71 unveils new ecosystem to support Web3 start-ups', 2023.2.15.